


#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

2015년 자료 3

2015년 제주 평화의 섬 선언 10주년

“비무장 평화의 섬,  
그 의미를 조명·성찰하고 계획한다!”

2015.10.29

 **진주교 서울대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우)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명동2가) 가톨릭회관 621호  
전화 : 02)773-1050 팩스 : 02)773-1051 홈페이지 : [www.catholicjp.or.kr](http://www.catholicjp.or.kr)  
이메일 : [jupecas@catholic.or.kr](mailto:jupecas@catholic.or.kr)

##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621호

발행일 2015년 10월 29일

전 화 02) 773-1050

전 송 02) 773-1051

홈페이지 [www.catholicjp.or.kr](http://www.catholicjp.or.kr)

이메일 [jupecas@catholic.or.kr](mailto:jupecas@catholic.or.kr)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9596-13-001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제2회 강정 평화 컨퍼런스

2015년 제주 평화의 섬 선언 10주년

**“비무장 평화의 섬,  
그 의미를 조명, 성찰하고 계획한다!”**

2015. 09. 07 - 09 / 강정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주최 : 제주교구/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 한국 예수회

## 서 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라고 밝히면서 온 인류 가족과 교회의 긴밀한 결합을 촉구합니다.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그것을 해석해 줄 의무”를 갖습니다.(사목헌장 4항, 민족들의 발전 13항, 사회적 관심 7항 참조) 교회는 진리를 증언하고, 불의를 고발하며, 세상의 참된 발전에 협력하고 기여합니다.

2014년부터 제주교구·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한국 예수회 공동으로 강정 평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 평화의 섬 선언 10주년을 맞아 “비무장 평화의 섬, 그 의미를 조명·성찰하고 계획한다!”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주최 측의 허락을 받아 신부님들도 함께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 이 자료가 사목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박동호 신부

## 목 차

▣ 강정평화 컨퍼런스의 취지와 목적, 구성 .....	6
▣ 주제 발표	
•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평화 / 강우일 .....	9
• 제주 세계평화의 섬 선언의 의미와 전망 / 고창훈 .....	16
• 미국의 핵 안전보장정책과 동아시아의 안전 보장 / 마고사키 우케루 .....	27
• 오키나와로부터의 메시지 / 오시카와 토시오 .....	34
▣ 소모임 발제	
▪ 알뜨르 비행장 평화공원 조성	
• 알뜨르 비행장의 과거와 현재 / 박찬식 .....	37
▪ 동북아 비무장 평화연대	
•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 전략과 제주해군기지 / 정옥식 .....	46
• 동아시아국제연대활동과 향후 방향 / 구중서 .....	55
• 기지반대 동북아시아 연대활동에 대해서 / 아시토미 히로시 .....	57
▪ 평화교육	
•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의 평화교육 사명 / 박동호 .....	59
• 평화 패러다임과 평화국가 만들기 / 이태호 .....	61
• 평화교육 / 박도현 .....	73

## ▣ 제2회 강정 평화 컨퍼런스 취지와 목적

2015년 제주 평화의 섬 선언 10주년을 맞아  
“비무장 평화의 섬,  
그 의미를 조명·성찰하고 계획한다!”

### 1. 강정평화 컨퍼런스의 취지와 목적

작년 “너에게서 평화가 시작되리라!” - ‘동북아 군축평화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상황분석’이라는 주제로 제 1차 강정평화컨퍼런스가 시작되었다.

강정 평화 컨퍼런스는 강우일 주교의 뜻에 따라서 제주교구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 그리고 예수회 한국관구가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다.

#### 강정 평화 컨퍼런스의 목적은

제주도와 오키나와, 괌 등 동북아의 군사적 배치로 자연과 주민의 삶이 훼손되고 있는 여러 섬들을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하여

- 1) 동북아시아의 역사 안에서, 무엇보다 제주를 포함해서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인 배경이 되는 여러 지역들의 역사와 현실을 바탕으로
- 2) ‘평화의 섬’ 개념에 ‘비무장’의 의미가 필수적으로 함축되어야 함을 전문적이고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가톨릭을 비롯한 여러 종교의 신학적인 바탕과 인본주의적인 배경을 탐구하고 인식하며
- 3) 이들 내용과 정보를 좀 더 널리 알리면서, 평화의 섬 실현을 원하며 참여하는 이들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활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펼쳐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 2. 금년 제 2차 강정평화 컨퍼런스 주제와 구성, 목표.

제주 평화의 섬 선언 10주년을 맞는 금년 컨퍼런스는

“비무장 평화의 섬, 그 의미를 조명, 성찰하고 계획한다!”라는 모토 아래

네 분의 주제 발표와, 알뜨르 비행장 평화공원 조성, 동북아 비무장 평화연대, 평화교육 이렇게 세 개의 주제별 소모임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한국과 일본, 80여 명의 초대받은 참가자들로 이루어진 3개 주제별 소모임 안에서 발제 및 집중적인 나눔을 통해 제주 역사에서 평화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평화의 섬들간의 연대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 알뜨르 비행장을 평화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 주제 발표

-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평화  
강우일 주교(제주교구장)
- 제주 세계평화의 섬 선언의 의미와 전망  
고창훈 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
- 미국 핵 안전보장정책과 동아시아의 안전 보장  
마고사키 우케루(孫崎享)
  - 오키나와로부터의 메시지:  
오키나와의 역사로부터 비무장 평화 성찰  
오시카와 토시오 주교(押川壽夫 司教)



##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평화

강 우 일 주교 (제주교구장)

### 우리 현실 속에 평화란 가능할까?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일까? 무력을 동원한 전쟁만 없으면 평화일까? 지금 우리나라 백성 중에 몇 사람이나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느낄까?

한국 사회는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통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고 시장 가고, 나들이 가는 과정에서 집을 나서면 많은 시간 도로를 달린다. 그런데 그 도로가 평화롭지가 못하다. 요즘 와서는 이렇게 초를 다투며 경쟁 운전을 하다 보니, 남이 진로를 방해하거나, 끼어들기를 하게 되면 난폭하게 앞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위협과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도로가 전쟁터로 변하였다.

고 3 학생들이 입시 준비 과정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마치 바이올린 현을 잡아당기다 보면 줄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팽팽한 상태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한다. 입시 시즌이 다가오면 교실 안의 그 팽팽한 공기가 폭발하듯 견디지 못한 학생이 발작을 일으킨다고 한다. 거기서도 또 다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심리적 전쟁터인 학원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 몰라, 자신의 상처와 자신이 받는 억압을 다른 동료 학생에게 쏟아 붓고 철저한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억누른다. 그 고통과 억압을 견디다 못해 적지 않은 아이들이 해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시전쟁이라고 한다. 입시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 취업전쟁으로 전쟁이 이어진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현실을 분석한 한 고용노동부 작년 자료를 보면,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작은 사업체는 적극적으로 일할 사람을 찾았는데도 7만명을 구하지 못했다. 부족 인원이 10.6%다. 한국경영자총협회 2015년도 신입사원 채용실태 자료를 보면, 대졸신입사원 취업 경쟁률은 대기업이 35.7 대 1, 중소기업이 6.6 대 1이다. 대졸자들 거의가 처음엔 다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삼는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분포도를 보면, 대기업 종사자가 197 만 4 천명(10.5%)에 지나지 않고 대기업 비정규직이 32 만 8 천명(1.7%), 중소기업 정규직이 1081 만 3 천명(57.5%),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568 만 4 천명(30.2%)다. 대기업 종사자가 10 명 중 한 명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 가까운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2014 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300 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을 100 이라고 잡았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4 이고, 중소기업 정규직은 52, 그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 밖에 안 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대기업의 거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 된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기를 쓰고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대학 졸업 2 년 후, 첫 직장이 중소기업인 대졸자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상향 이동에 성공한 비율은 7.5%에 불과했다. 그러니 청년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든 대기업에 진입을 해야지 첫 출발을 작은 회사에서 하면 향후에도 좋은 회사로 옮겨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체질화되어 있다.

요즘 현 정권이 추구하는 여러 정책 중 가장 중시하는 대목이 노동개혁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이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는 이중구조의 노동시장을 해소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100 만 명을 구제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이라고 한다. 유연성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노동자 고용의 유연성이고, 이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쉽게 자르고 쉽게 채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정성이란 노동자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유연성과 안정성이란 이율배반적 개념이다. 한 쪽에선 잘 자를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이고, 다른 한 쪽에선 동시에 잘리지 않게 하겠다니 이 상반되는 가치를 현실 속에서 양립시키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모를 일이다.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품생산에 소요되는 코스트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데, 코스트의 가장 큰 부분이 노동자의 인건비다. 그래서 기업은 정규직 직접 고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외부 용역회사를 통한 비정규직의 간접 고용으로 채운다. 어떤 회사는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아니면, 국내에 공장을 두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인건비를 몇 분의 일로 줄인다.

이주노동자들은 그 중소기업 임금 수준의 반 밖에 못 받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이주민들은 국가 간의 심한 경제수준 격차 때문에 좀 더 나은 삶을 향하여 길을 떠난다. 그러다 보니 온 세계가 양극화의 제물이 되고 말았다.

15년 전쯤에 로마에서 열린 ‘세계 이주민사목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 때 아프리카에서 온 어느 선교사 출신 주교가 한 이야기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아프리카 내륙의 생활수준은 너무 가난하고 열악하다. 아직 아프리카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TV 등 대중매체에 접근할 수 없어서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지만, 후에 이들이 인터넷이나 TV 등의 매체를 통해서 유럽이나 제1세계 시민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얼마나 즐기면서 사는지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이주의 물결을 세상이 과연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의 예상이 오늘날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다.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수단, 시리아, 이라크 북부의 난민들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유럽을 향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이주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 있는 재산 탈탈 털어서 밀항 중개상들에게 주고 고물 배를 얻어 타, 지중해를 향해하다가 풍랑과 기아에 시달리며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이 바다 밑으로 수장되고 있다. 오늘의 세계는 전쟁터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귀한 생명이 전쟁터도 아닌 곳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있다. 이 지구촌이 과연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동네인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슬람 국가 IS에 끊임없이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몰려가고 있다. 중동 지역만이 아니라, 유럽 출신 젊은이들도 많이 지원한다. 그들은 유럽에 살긴 했지만, 대체로 제3세계로부터 이민해 간 이주민의 2세, 3세 자녀들이다. 그들도 평생 발버둥 쳐야 유럽사회의 주류가 될 수 없고, 최하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과 분노에서 현대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뒤집어엎으려고 극단적인 무력투쟁에 가담한다. 근본적으로 제1세계와 제3세계 국가 간의 과도한 빈부의 격차와 계층 간의 경제적 불균형에서 축적된 분노와 증오가 원인이다. 이런 격차와 불균형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 평화가 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극도의 빈부 격차와 계층 간의 불균형을 촉발해온 것이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시스템이다. 국가 간의 모든 종류의 관세 장벽과 규제를 허물어 버리고 오로지 시장의 완전 자유경쟁 역학이 알아서 경제성장을 이루고 부를 분배하도록 시장

에 맡겨버리는 경제시스템이다. 시장경제는 부를 창출해 내는 데는 과거의 어떤 경제 시스템보다 효과적이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을 통하여 통계상으로 보면 사상 최대의 경제발전과 부를 기록해 왔다. 그런데 그 부를 분배하는 데에는 철저히 실패했다.

최근 미국 CNN의 기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최고경영자 덕 맥밀런(Doug McMillon)은 지난 한 해 총 1940만달러의 보수를 받았다. 이는 월마트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의 800배에 달하는 급료다. 월마트 보통 직원은 한시간에 9달러의 시급을 받는다. 이건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다(Something is terribly wrong here)”라는 코멘트가 있었다.(8월 21일 헤럴드 경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IM 부문 대표이사 사장 작년 연봉은 145억 7,000만원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노동자가 주 40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받는 액수를 환산하면 약 1000배에 해당된다. 이런 세상을 그대로 버려두고 평화를 논하는 것이 가능할까?

일본은 1990년대 초에 부동산만 갖고 있으면 결코 손해는 안 본다는 신화로 부동산가치가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 그러나 1991년을 고비로 부동산 값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고 그 후 10년을 급격한 경제 침체기를 겪었다. 이에 1999년 2월 일본 Obuchi 정부는 ‘일본경제재생을 향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 전략회의’를 열었다. 일본 정부는 ‘나카타니 이와오’라는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 나카타니라는 사람은 자신이 주도하여 전력투구했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시스템의 선택에 대해 지금에 와서 회한의 고백을 하며 이렇게 표현하였다. “그 때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일본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이었다. 미국의 잘못된 선례를 뒤따르며 일본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끌어안게 될 줄은 몰랐다. 신자유주의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만, 이윤추구라는 대명제 앞에 신뢰, 평등, 연대라는 사회적 가치는 해체해버리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다. 따라서 고립된 개체보다 연대하는 집단으로서의 경제시스템이 과제다.”

일본은 90년대 계속 신자유주의적 정책인 [자유화, 국제화,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한 끝에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가 산산조각 나는 체험을 했다. 생애를 바쳐 충성하던 회사는 더 이상 사원을 가족으로 끌어안고 짊어지고 가는 존재가 아니었다.

옛날에는 경영자와 노동자는 봉건사회의 영주와 충신 같은 정과 의리로 뭉쳐진 끈끈한 인간관계가 있었지만, 신자유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면 언제라도 털어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갈 수 있는 무정한 이익단체로 바뀌었다. 동료들 사이도 우정이나 인정 같은 것은 다 사라지고,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가차 없이 짓밟고 넘어가야 하는 경쟁상대로 변해갔다. 공동체가 해체되고 자기 이익만을 최우선하는 개인으로 다 조각조각 쪼개졌다. 나까타니라는 사람의 후회어린 고백은 이렇게 붕괴되고 메말라 버린 인간사회에 대한 탄식이며 한탄이다.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과 인식을 드러낸 표현이다. 아무리 경제가 중요해도 인간들 사이의 신뢰와 평등과 연대라는 가치가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한 고백이다. 경제가 인간의 기본권과 기본적 가치를 대체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다. 우리 한국 정부 경제전문가들은 아직도 신자유주의의 신화에 사로잡혀 혈떡거리고 쫓아가며 그것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비인간화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할 전망이 도대체 보이질 않는다.

### 평화의 그리스도교적 좌표

프란치스코 교종은 2014년 세계 평화의 날을 기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형제애가 바로 평화의 바탕이며 평화로 가는 길임을 선포하였다. 세상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계층이 달라도, 근본적으로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가족의 일원이고 형제라는 성서적 가르침에 되돌아가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교종은 형제애를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기 위해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출발하였다. 아벨은 양치기이고 카인은 농부였다. 아벨은 유목문화를 상징하는 사람이고 카인은 농경문화를 상징하는 사람이다. 문화가 다르고 활동이 다르다. 유목민들은 가축을 키우면서 목초지를 찾아 이동한다. 농경민은 한 자리에 정주하면서 땅을 일구고 남이 자기 땅에 들어와 경작지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유목민과 농경민은 근원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다.

서로 판이하게 다른 유목민과 농경민이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둘 사이는 단절될 수밖에 없고, 단절은 폭력을 가

져온다. 그런 이질적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존중하며 공존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 한 아버지의 동등한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 권익을 존중하려는 근원적인 회심을 하지 않는 한,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야기되는 온갖 갈등과 충돌을 해결할 수 없고 평화를 결코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바오로 6세의 회칙 ‘민족들의 발전’을 인용하며 먼저 부유한 나라들이 아직 덜 발전된 나라들을 도와야 한다는 **연대의 의무**, 강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공정하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사회 정의의 의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고, 한 쪽의 발전이 다른 쪽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보편적 사랑의 의무**, 이 세 가지 의무를 호소하였다.

또 교종 프란치스코는 베네딕토 16세의 회칙 ‘진리안의 사랑’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형제애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족들과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상대적 빈곤, 즉 양극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형제애의 원칙을 증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효과적인 정책’이란 동등한 인간 존엄과 기본권을 지난 사람들에게 ‘자본’과 서비스, 교육, 보건, 기술을 보장해주고, 누구나 자기 인생 계획을 세우고 실현할 기회를 가지며 인간으로서 온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소득의 불균형, 즉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는 교회가 가르치는 ‘사회적 저당권(social mortgage)’의 개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인간은 재화를 소유할 수 있지만, 소유자는 그 재화를 자기만의 사유물이 아니라 공유물로 여겨야 하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도록’(성 토마스 아퀴나스) 그 재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자본을 가지고 설비를 갖추고 원료를 사서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생산된 상품을 팔아서 남는 이윤은 자본을 제공한 자본자만의 것이 아니고, 생산 과정에 참여한 모든 노동자들의 공동의 몫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 양식을 선택하며 오늘의 소비만능주의에서 해방되는 일임을 일깨운다.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사람이 하느님과 이웃에게서 서서히 멀어지고 물질적 부를 탐욕스럽게 추구한 데에서 시작된 것이다. 인간보다도 부를 더 상위에 놓고 부를 추구하기 위

해서는 인간을 희생시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가치관의 붕괴에서 양극화는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제적 이윤을 지상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는 시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내고 생활양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교종은 강조하였다.

교종께서는 상처받은 이들, 굶주린 이들, 난민들과 강제 이주민들, 그리고 공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지적하였다. 교회는 또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책임자들에게 들려주고, 온갖 형태의 적의와 폭력, 인간 기본권의 침해를 멈추게 하려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무력을 통하여 폭력과 죽음을 확산시키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찔러야 할 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무기를 든 손을 거두십시오! 무력의 길을 포기하고 대화와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만나러 가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주위에 정의와 신뢰와 희망을 다시 세우십시오.’

## 제주 세계평화의 섬 선언의 의미와 전망

제주4.3화해, 세계섬위원회와 강정생명평화 운동의 융합을 통한  
새 세계평화의 평화섬을 시작한다.

고 창 훈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I. 서론 : 세계평화의 섬 선언 10년의 해에 제주평화의 정체성을 생각한다.

세계평화의 섬 10주년을 생각할 때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선언적 의미만 남아있고, 제주지역차원에서는 그 의미를 강조하지만 국가적으로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집중하면서 제주평화의 정체성은 퇴색되어 버렸다는 비관적인 지적들이 많다.

2014년 11월 21일,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이 개최한 제주4.3 국제포럼에 참여한 아시아재단 한국지부의 피터 벅씨는 제주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제주평화포럼이 제주포럼으로 바뀌면서 평화의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지적을 하였다. 그는 제주평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도가 ‘한중일 정상회의 사무국을 제주도로 이전하는 일’에 다시금 노력할 것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제주도가 연안경비협력, 자연재해에 대한 초기 경보체계의 협력, 사막화 대응 협력, 국립박물관 교류사업, 문화축제 운영 등의 일을 할 것도 제안하였다.

제주평화의 정체성이 상실될 위기에 처한 지금·여기의 상황에서 정체성을 찾아 나가려는 세 가지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제주4.3화해의 다음 단계를 생각한다.

2013년 4월 제주4.3정부보고서의 영문판을 근거로 2014년 3월 ‘제주4.3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한미공동위원단 구성 국제청원문 32개항’이 제시되고 제주4.3 치유의 국제적 해결 노력이 시작되었다. 2015년 3월 워싱턴 디씨에서의 <제주 4.3화해의 다음 단계>, 그리고 2015년 7월 주한미국대사에게 제주4.3 국제배상의 보편적 원리와 특수성을 논의하고 미국정부에 4.3의 이해와 4.3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과 4.3정부보고서 영문판을 전달하였다. 4.3치유의



한미구성 청원과 이를 통한 국제적 배상과 화해를 생각한다.

- 2) 2015년 세계섬학회 : 제주대학교의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는 <세계 섬지역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세계섬위원회(I-20)을 설립하고 이를 G-20 부설기구로서 세계섬 전문 기구화 할 것을 모색한다. 2014년 9월 UNSIDS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회의>에서 세계섬지도자회의 Islands-20 Initiative를 승인받아 2015년 10월 호주의 타즈메니아 지역과 태평양 섬나라 중심국가인 피지공화국이 주축이 되어 제주도에 세계섬위원회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UN 작은섬국가연합>과 <G-20 섬지역>의 이익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징검다리, 준외교 역할을 본격화한다.
- 3) 2015년 역시 제주강정마을의 생명과 평화의 의미와 전망은 피할 수 없는 갈등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나 해군기지는 금년 12월 완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반면에 강정마을의 ‘강정과 제주의 평화를 염원하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빛어낸 ‘강정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이하 ‘평화 센터’)도 완공되어 이제 드디어 힘찬 날개짓’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5년 8월 12일 평화센터 창립총회에서 강우일 주교는 “해군기지가 곧 완성된다 하더라도 강정은 동북아 평화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첨가하면 반죽이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평화센터가 동북아 평화정신 확산을 위한 누룩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세계평화의 섬> 비전과 정책으로 제주지역이 주체적으로 평화문화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새롭게 인정을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국의 하나인 중국은 제주도에 연간 300만 이상의 관광객을 보낼 뿐 아니라 집중적으로 제주도에 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을 벌여 나가고 있다. 6자회담국의 또 다른 하나인 미국은 강정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자국의 잠수함 등을 제주도에 정박시키려 하는 등 해군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가려 한다. 제주도를 중심에 두고 미국은 국방력과 안보를, 중국은 관광과 경제를 무기로 지배하려 하는 상황을 맞이하여 제주도가 나름의 평화정체성을 키우는 전략을 생각하면서 생존해 나

가려고 한다면 방법은 국제기구, 국제평화교육, 국제평화문화를 제도화 시키는 ‘새로운 평화이론’에 의거해서 갈등이나 전쟁 예방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시대에 대비해서 6자회담국과 세계평화의 섬 협약을 체결하여 ‘코스타리카 형’ 아시아 세계평화의 섬을 구축해 나가는 길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현실적인 갈등 예방의 논의가 “신평화이론” (new peace theory)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강정생명평화의 다음단계를 준비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월렌스타인은 (1984) 국가는 세계체제가 체제를 유지해야 할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을 때 그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 한국정부가 민주주의 국가로 정책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어야 하는 만큼 강정문제의 갈등해결에도 이러한 원리는 적용된다.

거헨과 나이는(1989) 안보적 관심이 일방적이지 않을 때 복잡한 상호의존성이 서로 맞물려서 움직이는 연동장치를 창출해서 갈등해결의 평화를 구축해 갈 수 있다고 한다. 남북한 갈등해결을 위한 6자회담국 회담이 모색되어 왔다. 6자회담국 회담 자체의 존속이 하나의 연동장치 같은 기능을 한다. 코스타리카의 중립국 평화의 섬 정책은 중남미 6개국 평화협약으로 유지되고 있다. 6자회담국들과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을 위한 세계평화의 섬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제주도가 중국과 미국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평화와 환경을 융합하는 국제기구를 창설할 수 있을 것이다. 러셋과 오닐(2001)은 국제기구의 설립과 운영이 전쟁의 위협을 줄이는 갈등해결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헤그르(2003)는 전쟁을 방지하려는 민주적 평화이론의 발전이 전쟁을 억제하는데 자유민주국가는 민주적인 국가간의 전쟁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주가 새로운 세계평화의 섬으로 도약하려면 새 평화이론에 입각한 제주평화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II. 제주4.3화해의 다음단계 : <제주 4.3 사회적 치유를 위한 한미공동위원단 구성 청원>을 통해 4.3의 진실, 국제적 배상과 화해를 생각한다.**

#### **4.3 사회적 치유의 논리 : 개념, 성과와 사회적 치유**

2015.7.9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제주4.3평화상추천위원장)와 정문현 제주

4.3희생자유족회장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4.3대비극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면담 요청 서한에서 제주4.3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한국정부의 성과와 사회적 치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주도민 3만명이 희생된 학살 사건은 이차대전 후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전 시대에 발생하였습니다. 제주4.3사건이라고 알려진 학살은 주로 한국군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그 사건은 제주도가 미국 군사 점령의 통제하에 있던 미군정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남겼고, 그 고통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제주4.3사건 정부보고서를 보시면 한국 정부가 이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노력을 수행해 왔습니다. 제주 4.3 사건보고서 자체를 발간하는 일과 함께 한국 정부는 4.3 평화공원, 4.3 평화기념관 설립(과 제주4.3희생자 국경일로 지정) 등 이 비극을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이 비극이 일어난 상황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제주4.3비극의 여러 사건으로부터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집을 잃고 봉급을 받을 수 없는 희생자들은 오랫동안 빈곤 속에 가족들을 부양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희생자의 다수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보다 광범위한 의료보호와 치료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극의 사건으로 인한 지속적인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사님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이러한 과거의 비극에 연관된 과정에 대해 해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4.3비극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미국정부의 노력이 이 비극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제주도 사람들 고통의 상당 부분을 진정시켜 줄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은 한미 양국이 서로 상호 간에 국제적 예의를 지키는 가운데 두 국가 간의 연대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국인과 미국인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4.3치유의 제주청원대표단은 한미공동위원단 구성과 다섯 가지 목표를 표방한다.

#### **한미공동위원단 구성과 다섯가지 목표**

공동위원단의 목표는 (말과 행동에 있어 배상이 이루어지는) 배상적 정의를 촉진하고, 한미 양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공동위원단은 2000년에 결성된 국가위원회(제주 4·3위원회)가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공동위원단의 다섯 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 1) (미국의 참여 없이 몇 년 전에 종결된) 국가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미비한 부분을 채우고 최근 정보를 덧붙여 진상조사 결과를 갱신한다.
- 2) 특히 새롭게 발견되고 갱신된 정보의 관점에서 국가위원회 권고안의 완결 여부를 평가한다.
- 3) 이미 진행된 행위들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인과 공동체에 행해지고 있는) 지속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 4) 위의 1번, 2번 그리고 3번의 관점에서, 국가위원회의 권고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다음 단계의 일들을 추천하고 제주 사람들과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사회적 치유를 이루어내기 위한 더 큰 통합된 사회정의 계획의 일환으로 이러한 단계들의 진행 상황을 감독한다. 그리고
- 5) 한국과 미국 책임을 확실히 하고 또한 양국의 민주주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배상적 정의를 촉진하는 일들을 추진한다.

### 제주 4.3의 국제적 배상과 화해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와 특수성의 원리

한미공동위원단 구성 청원을 준비함에 따라, 2015년 3월 ‘제주4.3 다음단계’의 워싱턴 컨퍼런스와 2015년 3월 평화섬 춘계 세미나, 그리고 2015년 7월의 동계세미나에서 제주4.3의 국제적 배상에 대한 준거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뉴욕시립대학교 존 톨피 교수는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배상 분야는 국제적 사건의 관할에 따르게 되어 있는 만큼, 배상은 유엔이 인권의 총체적 침해에 대한 배상권의 기본 지침( UN’s Basic Guidelines on the Right to Reparation for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에 의거해서 제주4.3피해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규명하고 배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본의 구니히코 요시다 교수는 미국의 제주4.3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평화시대인 미군점령기에 발생한 사건

이므로 4.3희생자들이 미국정부에 배상을 요청할 경우 미국은 국제법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미국정부의 배상은 상당히 광범위한 과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배상하는 일과 미국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진정한 화해를 위하여 과거의 역사적 부정의에 대하여 화해의 이론적 준거 틀에 부합되게 미국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 과거의 부정의에 대한 사실 확인과 인식 (2) 역사적 책임의 인정 (3) 가해자 입장에서의 진정한 사과와 보완적인 배상 (4) 희생자로부터의 용서가 필요하다. 제주4.3비극에 대한 국제적 해결 노력이 이러한 방향에서 진지하게 이루어질 것이 요청된다.”

### Ⅲ. 세계섬위원회(I-20)의 다음단계 : 세계섬위원회 설립과 세계섬지도자회의의 지속적 개최로 I-20이 G-20 부속기구가 되길 바란다.

#### 1. 2014년 9월 UNSIDS의 세계섬지도자회의 승인과 2015년 10월 세계섬위원회 창립

2014년 9월 3일 세계섬학회는 UN 작은섬발전도상국 지속가능한 발전회의에서 <세계섬 지도자회의 An Islands-20 Initiative>(I-20)를 제주도에 유치하는 사업을 제안 승인을 받아, 2015년 10월 G-20 국가의 섬 지역과 UNSIDS의 작은 섬 국가를 결합시켜 나가는 세계섬위원회 Islands-20 Committee의 본부를 세계섬학회의 기관으로 설립하고자 한다. <세계섬위원회>는 <UN 작은섬 발전도상국> 39개국과 <G-20국가의 섬 지역>을 연결하는 국제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소수집단인 <작은 섬 국가>의 권리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 2015년 대한민국 제주도에 세계섬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무관심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작은 섬 경제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하고자 한다. 이 포럼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 안보,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환경적 수용성으로 대변되는 세가지 “E”는 지구 곳곳에 위치한 작은 섬들의 불편한 현실이다. 이 회의는 특별히 작은 섬들이 직면하게 되는 이 세가지 “E”의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탐구함으로써 UN이 정한 <2014년 작은섬발전국 이해의 해> 취지를 계승하려 한다.

- “<작은섬나라 국가 이해의 해>와 작은 섬 경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 이에 대한 연관된 연구나 정책집행의 사모아 해법을 평가하고
- 작은섬국가 연합의 관심사를 지역이나 세계포럼의 정책아젠다로 제안하는 노력을 탐구하고
- <작은국가연합>과 <G-20 국가의 섬지역>, 그리고 <작은 섬국가연합>의 공동 리더십을 위한 <섬 20>을 주도하여, 개별적으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섬의 해법을 실현하며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작은 섬 나라 발전도상국의 해>에 UN이 표명했던 세계적 관심의 맥락과 G-20 국가의 거대한 경제 구조가 경제적으로 보다 합리주의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취약한 작은 섬들이 작은 에너지 안보, 발전, 환경적 보호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재정적 제약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0년 에너지 안보를 측정하는 메이플 지수에 의하면 39개의 섬나라 중 33개의 섬 나라가 “극도로 위험한” 수준에 있다. 싱가포르, 나루, 미국령 사모아 괌과 네덜란드 안틸레스 섬 역시 취약 지역으로 노출되어 있다. <작은섬발전도상국 이해의 해>인 2014년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세계의 작은 섬들의 에너지 안보에 대해 심각하고 집중적인 평가없이 결론을 내리거나 마감을 해서는 안 된다.

제주의 <섬-20 이니셔티브>는 <작은 섬나라 연합>의 사모아국 애피아 회의에서 다루었던 이슈를 포괄하는 특별회의를 개최함으로써 <2014년 작은 발전도상국 이해의 해>에 대한 충격(?)을 작은 섬의 에너지 안보라는 렌즈로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그것은 정부 입장에서, 산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제기구의 입장에서 <작은 섬 발전 도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해 3차원적 분석과 진단을 하려는 데 있다.

특별한 노력은 2016년 <G-20 국가>들 회의에서 <섬-20>의 관심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는 체제, G-20 섬 지역이 합심하여 건의하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일이다. 대한민국 제주도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 회의로서 2016년 6월 27일과 29일 <세계섬지도자회의>와 (해녀학총회)를, 그리고 2016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피지공화국의 수바에서 제3회 세계섬지도자회의와 (해녀학아카데미)를 실행하려고 한다.

## 2. 2015년 창립대회와 I-20의 G-20 부속기구 건의 2016년 3개 국제대회 (제주대회, 피지공화국 대회, 호주 대회)

2015년 10월 제주에서 열리게 될 창립대회에는 호주 닉 매김 상원의원, 김우남 한국국회 농식품수산업해양 상임위원장, 마헨드라 쿠마르 전 피지공화국 외무부 장관 참여하여 <세계섬위원회>의 창립을 알린다. 그리고 <제1회 섬 -20 이니시어티브> 라는 이름으로 포럼이 열린다. 대한민국 제주도에 세계섬위원회 설립을 통해 무관심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작은섬 국가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포럼이다. 여기에서 G 20 정상회의에 섬 20의 관심사를 전하는 일에 대해 나누고, 지역과 세계 포럼에서 작은 섬 경제에 대한 정책이슈화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평화의 섬 국제리더십을 위한 국제 연계 프로그램과 공동강좌에 대한 제안과 논의의 자리도 있으며 세계 국제 녹색섬 포럼 하와이대회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진다.

### 3. 세계섬위원회와 제주대의 '세계유산의 섬 거버넌스' 대학원과 6개국 문화제 지원 계획

세계섬학회와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는 일본 홋카이도대와 미국 하와이대와의 협력으로 2010년부터 평화섬 국제리더십 스쿨을 운영해 왔다. 이 리더십 스쿨은 제주4.3과 세계평화의 섬, 세계유산의 섬 거버넌스와 서머스쿨과 윈터스쿨로 구성, 운영한다.

우리는 세계섬위원회 출범을 세계섬학회와 제주대학차원에서 같이 축하하는 6+1 개국 문화제 : 6개국 문화제, 평화섬불턱회의, 세계평화불턱회의, 불턱문화행사와 평화 섬 이레축제 등의 2015년 10월 개최를 지원한다.

이러한 생각은 글렌 페이지 박사가 제주평화섬 포럼에서 2006년 6자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6자국 문화장관회담을 제안한 데서 비롯되었다. 2014년에는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그란트 맥콜 박사가 제주포럼의 제주대학교 세션에서 호주도 참가하는 아시아지역의 대학들이 6+1 개국의 평화교육 교류를 제안했다. 세계섬학회와 제주대가 2008년 세계섬학술대회를 기념하는 평화섬 국제리더십 스쿨을 운영해왔는데 이러한 생각에 동참한다.

우리는 제주지역이 제주4.3평화와 해녀의 지속가능성 등을 주제로 하는 국제평화영상제의 출범을 돕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생각을 영상제 워크숍으로도 적용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차례 대학 차원에서 영상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향후 6+1 개국의 평화영상제를 개최할 경우 대학차원에서 이러한 교류를 지원하려

는 취지이다.

우리는 제6회 세계평화불턱회의 제주대회를 9월 30일과 10월 3일에 그리고 일본 홋카이도대회를 10월 16일-18일 개최한다. 물론 한국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도 초대하여 이 대회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청년 포럼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온평리 불턱에서 세계섬위원회 출범 기념행사와 제주해녀춤공연을 갖는다. 제주춤 예술원과 온평리 어촌계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같이 개최한다.

불턱은 해녀들의 전통적인 공간을 말한다. 불턱은 마을의 바닷가근처에 돌로 에워싸서 만든 것이다. 거친 바람을 막아주면서 해녀들이 바당에서의 작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여기서 그들은 해녀들의 일상 활동을 민주적인 투표로 결정하고 바다 일을 결정한다. 작업 후에는 그들의 수확량을 해녀들의 바다작업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다. 해녀들은 제주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면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 ( 2010.7.30 가파도 세계해녀행사 팸플렛)

#### IV. 강정생명평화의 다음단계 : 강정국제환경대학원 설립을 통한 강정생명평화 마을의 화해를 생각한다.

제주 세계평화의 섬, 2007년 강정해군기지 건설로 딜레마에 빠지다.

2005년 역시 제주강정마을의 생명과 평화의 의미와 전망을 피할 수 없는 갈등의 시간들로 채워져 있다. 2007년 7월 1일 제주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한국정부 당국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운동과 비민주적 마을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강행한다. 그리고 그 일은 사회적 불화를 일으키는 잠재적 시한폭탄이 되었다. 해군은 2015년 12월 까지 군사기지를 완성하겠다고 발표한다. 군사기지로써 오끼나와가 이미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군사기지 자체가 공격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나의 기지가 생기면 또 다른 기지가 또 생긴다. 새로운 군사기지에 대한 반대투쟁 역시 3000일을 경과했다. 오끼나와 군사기지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제주도에는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쟁이 군사기지 건설 자체를 막을 수 없지만 제주도가 또 다른 오끼나와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날드 커크. 2012)



## 강정 생명 평화 사목 센터의 역할

2015년 12월 정부는 강정해군기지 완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반면, 강정마을의 '강정과 제주의 평화를 염원하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기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빚어낸 '강정 생명 평화 사목 센터'(이하 '평화 센터')도 이제 드디어 힘찬 날개짓'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5년 8월 12일 창립총회에서 강 주교는 평화 센터의 방향을 '평화를 위한 교육과 영성,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것, (연대를 맺어서 해군기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2015년 '해군기지가 곧 완성된다 하더라도 강정은 동북아 평화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첨가하면 반죽이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평화센터가 동북아 평화정신 확산을 위한 누룩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 강정국제환경대학원 설립의 과제

세계환경보존총회에서 환경단체들과 국제환경보존연맹이 '강정 사람, 자연, 문화, 유산의 보호'를 의제 181로 제안 논의하였지만 통과되지 못하였다. 제주도 윤용택 교수는 강정마을의 기적여행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강정 평화마을의 소망을 전하기도 한다. 2016년 9월 하와이에서 세계환경보존총회가 열리는데, 2012년 강정 의제를 제안했던 미국의 환경운동 단체들이 강정의제를 재상정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만약 2016년에 재상정한다면 거기에는 강정국제환경대학원 설립의 내용도 포함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그 환경대학원이 코스타리카 세계평화대학원처럼 UN이 지지하는 기구로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 바란다.

## V. 새 "세계평화의 섬" 비전과 정책 : 6자회담국의 세계평화의 섬 협약체결로 '코스타리카 형' 아시아 세계평화의 섬을 전망한다.

세계평화의 섬 선언 10년인 2015년 제주4.3화해, 강정생명평화와 섬 문명의 다음단계를 묻고 내용들을 채움으로써 제주평화의 정체성을 세우고 해양문명의 평화적 기여에 바른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란다. 사실 섬 문명의 국가는 대륙 문명의 국가들에 비해 평화적이라고 얘기된다. 제주가 그 섬 문명을 지키는 교두보가 되

어 나가려면 해양 문명의 다음단계를 채우는 평화기구 설립, 평화교육 운영, 평화문화의 국제적 공유를 위해 방법을 묻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

제주도는 아시아 태평양 협력시대에 환경적인 평화의 섬이었으면 한다.

제주도에 세계환경대학원을 설립하고 이를 UN이 기구화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삼려전통(자유 평등 평화)을 제주도 사람의 관용성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발표자 노트 : 전 UN 사무처장이 이러한 생각을 2012. 6.20-22 리오 지국정상회의 ‘ 녹색성장과 여행’ 세션에서 나름의 제안을 하였지만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2013.12. Strong University Network (SUN)을 결성하여 2014.8. 벨기에 하셀트대학교에서 제1회 녹색성장과 여행스쿨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 시대를 생각할 때 제주도와 DMZ는 평화완충지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발표자 주 : 비무장지대는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제주도는 UNESCO 국제보호구역으로서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평화완충지대로 국제관광지의 위상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유치 전략이 중요하다. 국제기구의 유치와 설립을 통해 국제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이론을 신평화이론 New Peace Theory라 하는데 제주도가 바로 지금 이러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2015년 1월 27일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제주도 의회 강연에서 제기했던 바 있는데, 제주도가 아시아의 평화완충지대가 되려면 1949년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모델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코스타리카는 군대를 폐지하고 중립국가가 되었고, 이를 기념하여 UN 결의로 UN 세계평화대학원을 유치했다. 아울러 인근국가들과 중남미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정부가 제주도의 평화완충지대 문제를 6자회담국과의 주요 의제로 제안하여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를 통해 6자회담국이 제주도를 아시아의 평화완충지대로 발전시키는 안을 국제협약으로 (예를 들면 세계평화의 섬 협약) 체결할 수 있다면 코스타리카 사례를 반영시키는 것이 된다.

## 미국 핵 안전보장정책과 동아시아의 안전 보장

마고사키 우케루 (孫崎享)

### 1. 들어가는 말 - 강정 해군기지 건설 어떤 맥락에서?

주제와 연결해서 주된 테마로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 외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하지만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그 안에 가장 중심에 있으므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제로부터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금 북한과 남한과의 사이에는 압도적인 경제적 차이가 있다. 북한의 통상병력으로 한국과 부딪혀서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 그것은 해군도 포함한다. 게다가 미군이 있으면 더욱 그러하다.

어떻든 강정마을 기지건설은 한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북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확증할 수 있다. 목적은 분명하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한국의 안전보장에 중국의 위협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 핵무기, 둘째 미사일타격, 셋째 공군력이라 할 수 있다. 해군의 중요성은 아주 작다. 결국 기지건설의 목적은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해군을 위한 것이 된다. 하지만 이 기지건설이 실제로 미국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겠는가.

지금부터 힘을 키워 중국이 핵무기의 대국이 되고,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고 결정하면 미국은 소멸의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우세하다 해도 안된다. 미국이 보복으로 중국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말한다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중국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한다면 미국으로선 그것으로 끝장이다. 그 때는 막을 수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면 반대로 어떤 때 중국이 미국에 핵무기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혹시 미국이 중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중국도 소멸해 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다. 그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자

신들이 절대로 중국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전문 용어, '상호 확인파괴전략'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주 복잡한 내용이어서 지금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자신들은 절대로 중국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작은 전쟁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어떤 상태로 발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어떤 형태로도 군사적인 분쟁에는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미국과 중국은 이 점에 대해서 이미 합의하고 있다. 신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국무장관(미국)과 국가안보 국무장관(중국) 사이에 이미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럼 왜 지금 강정에 이런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는가? 미국 전체의 안전보장을 생각할 때에 이 해군기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젝트는 아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군에서 미해군의 좁은 이익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발상도 아니다. 현장에 가면 갈수록 적대세력에 우위를 점하여 적의 세력에 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건설을 하고자 하는 군의 구도는 오키나와의 헤노코 미군기지 건설과 같다.

- 1) 미국에 있어서 헤노코 기지건설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 2) 그러나 상대정부에 압력은 넣어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실현한다는 것이다.
- 3) 상대정부로의 압력은 수상, 대통령도 대상으로 한다.

헤노코 문제에 대해 라이샤워 주일대사 보좌관을 지냈던 죠지 패카-드(George Packard)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해병대의 이익이 국방성의 정책이고 국방성의 정책이 대통령의 정책이다. 이와 같은 일이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에도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에 있어서는 절대로 필요한 정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국정부에 압력을 넣어 이를 수 있는 일로서 이득을 얻는 것이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통령에게 이에 대응할 힘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힘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결국 반대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 1. 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 그 안에서 북한의 위치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 특히 대북 전략을 생각할 때 냉전 이후 미국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냉전 중 미국의 전략, 군비, 병력 배치 정도는 소련의 위협을 전제로 구축됐다.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미국에겐 2 가지 선택이 있었다. 하나는 소련이라는 위협이 소멸되었으니 국방비를 대폭 줄이는 것, 다른 하나는 최강의 군사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배경으로 세계에서 미국의 지도적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것.

결국 미국은 후자를 선택한다. 그러나 분명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으면 미국 여론은 군사비 감축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위협(하는 대상)을 누구로 할까? 모색하게 되고, 이란 이라크 북한과 같은 불안정한 국가들이 그 대상이 된다. 이것들이 체계화 된 것이 1993년에 형성된 "버텀 업-리뷰(Bottom-up-Review)"이다.

Bottom up Review 는 다음을 골자로 한다.

- 냉전 이후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임무는 다른 초강대국의 출현을 허용하지 않는 데 있다.
-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를 충분한 군사력으로 영구화한다.
-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적 국제주의는 배제한다. 위기에 미국이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유지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동의한 국가들 연합으로 첫 결성 - 역주)은 그 때 그 때 경우에 맞추어서(Ad hoc base) 특별 기준으로 이루도록 한다.
- 이란, 이라크, 북한 등에서의 핵무기와 다른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군사 사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 일본과 독일의 군사력 증강, 특히 핵무기 보유화를 저지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① 이란, 이라크,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 ② 각각의 대량 살상 무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 ③ 이란, 이라크, 북한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방책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 그 안에서 북한의 위치”가 북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1993년 이후 미국은 이란, 이라크, 북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반면, 적어도 일본에서는 북-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그 정점이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회담을 하고 두 사람이 “북일 평양선언”에 서명하고, 10월에 국교 정상화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 흐름은 “이란, 이라크, 북한”을 적으로 자리매김한 미국의 전략에 합치되지 않는다. 부시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와 회담하면서 대북 정책을 엄중 문책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막는 것을 생각한다. 거기에서 크게 부각된 것이 납치 문제다. 납치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북일 국교 정상화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 아베 당시 국방부장관이다.

## 3. 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 그 안에서 북한의 위치

여기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북핵** 문제이다. 이것이 위협이 된다고 가리키는 것이 정말 위협적이라는 확신으로 인식된다.

## 4. 핵 전략에서, 원래 북한의 핵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1) 강대국들의 핵 전략은 상대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게다가 상대(소련, 현재의 러시아, 중국)가 미국을 파괴할 수 있는 태세를 용인하는 것이다.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은 미소 양측이 어느 정도로 서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가 하는 전략이다.

핵 보유국 A와 B가 존재한다고 하자. A국이 먼저 B국을 공격했을 때 B국에 분명히 상당 규모의 핵무기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렇게 되면 공격을 받은 B국이 남은 핵무기로 A국을 응징하고 A국가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A국은 자국에 대한 피해를 고려해서 B국을 공격할 수 없다. 이렇게 A국, B국 양측 모두 서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라고 부른다. 이런 전략체계를 만든 배경은 만약 B국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A국의 핵 공격으로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면 A국의 공

격이 있기 전에 핵 공격을 해버리고자 하는 유혹에 사로잡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 2)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지금의 러시아와 중국)과의 사이에서는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승인한다고 해도 핵 보유국이 많아지게 되면 위험성이 증가하고 완전히 제어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핵무기 확산을 금지할 필요가 생긴다. 이런 상황을 가장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은 키신저의 사고이다. 키신저는 핵무기와 외교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핵 보유국 간의 전쟁은 중소국가이더라도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진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전면 항복을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생존이 직접 위협을 받고 있다고 믿을 때 이외에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는 나라도 없다고 보여진다.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어떤 분쟁도 국가의 생존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틀을 만드는 것이 미국 외교의 일이다.

우리는 보통 서구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측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질까? 가방·마코-마크의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평범사, 2004)를 참조해보자.

“미국에게 북한의 핵은 과거 10년 정도 주요한 문제였지만, 북한에게 미국의 핵 위협은 과거 50년간 끊임없이 계속된 문제였다. 핵 시대에 있어 북한의 독특한 점은 어떤 나라보다 오랫동안 핵 위협에 항상 마주대하며, 그 그늘에서 살아왔다는 것이다. 한국 전쟁 때에는 종일 한 장으로 핵의 섬멸에서 벗어났다. 미군은 그 후 핵 탄도탄이나 지뢰, 미사일을 들여왔다. 1991년 핵 탄도탄이 한국에서 철수되었지만 미군은 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미사일 훈련을 계속했다. 북한에서는 핵 위협이 없어지지 않았다. 수 십년이나 핵위협과 마주해 온 북한이 기회가 있으면 『억지력』을 개발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 이런 두려움(공포감)을 갖고 있는 때 서방은 응당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여기서 헨리 키신저의 생각을 되살린다. 키신저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는 전면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편 그 생존이 직접 위협 받고 있다고 믿을 때 이외는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는 나라도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

다. 동시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며, 어떤 분쟁도 국가의 생존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틀을 만드는 것이 미국 외교의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지적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서방의 기본 생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5. 북한의 핵무기를 피하려면 어떤 분쟁도 국가의 생존 문제를 포함하지는 않는 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 한국, 일본 등은 “어떤 분쟁도 국가의 생존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틀을 만드는” 일을 해오고 있는가? 한미 합동 훈련 등은 북한에서 보면 분명히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움직임이다.

**6. 미국은 앞으로도 이란, 이라크, 북한을 적으로 하는 전략을 필요로 하는가?**

오늘날 미국 국내에서 군산복합체의 발언권은 종래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 이들이 향후 힘을 들이는 것은 다음의 영역이다

- 1) ‘이슬람 국가’ 등 중동, 아프리카의 이슬람 과격파와의 싸움을 확대한다.
- 2) 러시아의 위협과의 싸움을 강화한다.

이것들은 “북한을 적으로 할”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이슬람 국가’ 등 중동, 아프리카의 이슬람 과격파와의 싸움을 확대하는 중에 일본 자위대 등의 적극 참여를 필요로 한다. 그 가운데 “북한의 위협”은 일본이 참여하기 쉽게 한다.

**7. 미국으로서는 일본과 한국이 북한과 유화 외교에 나서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다른 한편, 일본, 한국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각각의 국익에 부합한다.

일본이 “북한의 국가 내지 정권의 전복을 꾀한다고 하는 공작”에 가담한다면 일본을 사정거리에 포함시키는 노동(미사일)을 가진 북한의 공격이 현실화 된다.

일본의 국익을 고려하면 “북한의 국가 내지 정권의 전복을 꾀하려는 공작”에 가



담해서는 안 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도 한반도의 긴장을 바라지 않는다.

일본, 중국, 한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협의를 진지하게 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국가 내지 정권의 전복을 피하는 공작”에서 최대한 거리를 두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 오키나와에서의 메시지: 오키나와의 역사로부터 비무장 평화 성찰

오시카와 토시오 주교 (押川壽夫, 司教)  
(오키나와 나하교구)

**오키나와 현 전체에서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오키나와 현에는 일본 전국의 미군 전용시설 면적의 약 75%가 집중되어 있어서, 현 전체 면적의 10.4%(오키나와 본섬의 18.8%)를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의 토지 약 20%가 미군기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외부에서 보시니 모르시겠지만, 20%를 차지할 뿐 아니라 그것도 가장 좋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입지조건이 마련된 부분의 영토를 강제로 접수한 것입니다. 오키나와는 기지의 섬으로서 미일 양국 정부의 <태평양 거점>이 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생략)

**아베정권에 대한 반대운동:** 후텐마기지의 현외 이전 소송을 제기하는 현민들의 대규모 대회에 3만 5천명이 모였습니다. 주교, 수도자, 신자도 모두 대회에 참가해서 대회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현민의 80% 이상이 헤노코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종교인들의 기도와 평화 집회 :** 6월 23일부터 9월 15일 종전 기념일까지 평화를 배우고 어필하는 행사가 아주 많습니다. 가톨릭을 포함해서 13개의 종파로 이루어진 오키나와 종교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도와 평화의 모임 <오키나와로부터 세계로 널리 퍼져가는 평화의 기도>를 주제로 해서 모였습니다. 매년 회를 거듭해서 금년까지 25회를 맞았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그 지구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에게 본래 심어져 있는 종교심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교구 평화위원회의 활동 :** 평화위원회는 매월 평화운동가나 학자(지식인)들

을 강사로 초빙해서 평화학습회(평화교육)를 열며 교구 평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кина와 영령의 날>에 오кина와 교구에서는 평화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오кина와 교구의 대응:**

- 평화위원회 설립 : 유엔 인권 위원회에 오кина와 상황 어필
- 6.23 <오кина와 영령의 날 오кина와 교구 평화순례> : 2015년 평화순례 주교 메시지

**마침말(매듭)**

기지 문제는 오кина와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지 건설 반대 운동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주도와 오кина와로 눈을 돌려야 한다.

아니, 그것뿐이 아니다. 자신의 문제로서 의식을 가져야 한다.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는 하늘의 소리이다!

## 소모임 발제

### 알뜨르 비행장 평화공원 조성

- 알뜨르 비행장의 과거와 현재  
박찬식 교수(제주문화유산연구원장)

### 동북아 비무장 평화연대

-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 전략과 제주해군기지  
정옥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동아시아국제연대활동과 향후 방향  
구중서(기지네트워크 대표, 평화바람)
- 기지반대 동북아시아 연대활동에 대해서  
아시토미 히로시(安次富 浩 헬기기지반대협의회 공동대표)

### 평화교육

-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의 평화교육 사명  
박동호 신부(서울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 평화패러다임과 평화국가 만들기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 평화교육  
박도현 수사(예수회)

## 알뜨르 비행장의 과거와 현재

박 찬 식 (제주문화유산연구원장)

### I. 알뜨르 비행장은 어떻게 조성되었나?

제주도에 일본군 항공기지가 최초로 건설된 것은 서부지역인 대정읍 모슬포 알뜨르의 해군항공기지(일명 '알뜨르 비행장')이다. 이 해군항공기지는 1933년에 '불시착륙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처음 건설된 후 1937년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 중국 남부를 폭격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건설된 것은 육군 비행장으로 1944년 5월 완공된 제주시 용담동(정뜨르)의 육군 서비행장이다. 또 조천읍(진드르)에는 육군 동비행장, 내륙지역의 교래리에는 육군 비밀비행장이 건설되고 있었다.

이러한 비행장들은 일본 본토 내 비행부대의 후방기동비행장 또는 근거비행장의 역할을 하였다. 비행장 건설과 함께 비행기·엄체(掩體)·건축물 등을 분산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해군 비행장과 육군 동·서비행장은 해상의 미군을 경계하는 항공기용이었고, 교래리의 비밀비행장은 미군 함정을 요격하기 위한 특공기용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내 일본군 군사유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고 잘 남아있는 곳은 모슬포 지역이다. 모슬포 지역에는 1930년대 초반부터 군사시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주진지로 설정되면서 연안을 따라 대대적인 방어시설이 구축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때에는 알뜨르 비행장이 난징 대폭격의 발진기지로 활용되었고, 1945년 종전 직전에는 제주도 항공기지로 확장되어 미군 상륙에 대비한 주요 전투거점이 되었다. 주변 알오름과 송악산 일대에 지하병커·격납고·탄약고 터·해안동굴(자살어뢰정 발진기지) 등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일본군의 최대의 방어지역이었고 결전지역이었다.

이 지역에 비행장 건설이 계획되었던 것은 1930년대 초반의 일이다. 일본 해군성은 1932년 8월부터 1933년 3월까지 토지를 매입하여 약 6만평 규모의 '불시착륙장' 용도의 비행장을 알뜨르에 처음 건설했다. 이후 중·일전쟁 직전인 1936년 11월부터 1937년 2월까지 부지를 더 매입하여 약 20만 평의 비행장으로 증설

하였다. 알뜨르 비행장이 실제로 사용되고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중·일전쟁 직후인 1937년 8월 중순의 일이다. 처음에는 일본 오무라 항공기지(나가사키현)를 출발하여 난징 도양폭격을 마친 폭격기들이 알뜨르 비행장에 와서 정비를 마치고 다시 폭격에 나섰다. 그러나 얼마 없어서 난징·상하이 등지로의 해양폭격 거점은 알뜨르로 직접 옮겨지게 되었다. 제주도로부터의 난징 공습은 36회, 연 600기, 투하폭탄 총량은 300톤에 이르렀다. 1937년 11월에 일본군이 상하이 부근을 점령하여 그곳에 비행장을 마련하면서 오무라 해군 항공대의 본거지는 상하이로 이동하였다. 이후 제주도 항공기지에는 오무라 해군항공대의 연습항공대가 설치되었다.

태평양전쟁이 터지고 나서 알뜨르 비행장은 다시 중요성을 인정받아 1943년부터 추가 확장공사에 들어갔다. 기존 20만평의 부지에 마련한 비행장을 2,200,000㎡(665,602평)의 항공기지로 확장하였다. 이 항공기지에는 기존의 비행장 외에 각종 부대시설과 건물이 함께 들어섰다. 1945년 3월 종전 직전 항공기지의 총 토지면적은 2,200,000㎡, 비행장 면적은 1,200,000㎡, 유도로 100,000㎡, 염채 20개, 청사, 병사, 공장, 전신소, 병사, 창고 등의 군사시설이 지어졌다.

태평양전쟁 막바지인 1945년에 이르러 ‘본토결전’ 작전의 중요 거점이 되고, 제주도 수비 강화는 일본군의 최고 급선무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제 58군에 배치된 3개 사단 병력 7만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으며, 제주 해군항공기지(알뜨르 비행장 포함)도 확대 강화되었다. 이는 조선 주둔 일본군 약 23만 명 중 3분의 1의 병력이 제주도에 투입되어 전도적으로 요새화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 대표적인 군사시설이 알뜨르 비행장 일대에 조성되었던 것이다.

## II. 알뜨르 비행장을 둘러싼 이견(異見)들

일제강점기 알뜨르 비행장을 비롯한 군사시설의 구축에는 제주도민은 물론 전남 등 다른 지역 청장년까지 노무자로 강제 동원됐다. 특히 제주도민들은 일본군의 요새화 작업에 총동원됐다. 군사시설 구축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44년께부터 마을별로 강제 동원 주민의 수가 할당되기도 했다. 알뜨르 비행장의 염채호를 만들거나 알오름 갯도진지 구축 작업에 끌려갔다가 부상을 입은 주민들도 많았다.

또한 1930년대 초 일본군은 알뜨르에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6개의 마을을 없애 버렸다. 주민들은 다른 마을로 이주하거나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농토 역

시 거의 강제적으로 빼앗겼다. 당시 일본 해군성은 토지 매입 절차를 밟기는 했지만, 혈값으로 사들인 강제 수용에 다를 바 없었다. 때문에 해방 이후 알뜨르는 적산(敵産)으로 취급되어 주민들에게 불하되지 않고, 국유지로 남게 되었다. 미군정 시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거치면서 이 땅은 국방부가 소유 관리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때 잠시 훈련소와 포로수용소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공군의 비행훈련장 정도로 활용될 뿐 거의 방치되어 있었다. 대정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방부(공군)와 임대 계약을 맺어 매년 소작료를 내며 농사를 지어 왔다.

1985년에 건설부가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1985년~1991년)을 내놓고, 제주도 지방정부가 송악산 일대를 관광지구로 지정했다. 또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도 유세 때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여 농민들에게 불하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적이 있다. 지역민들 모두 환영했으나, 일단 대통령이 된 후에는 허공에 뜬 약속이 되어 버렸다. 그 대신 1988년에 국방부는 송악산 일대의 관광개발계획을 취소하고 군사기지와 비행장을 기존 국공유지 70만평에 주변 토지를 더 포함시켜 197만평이라는 넓은 땅 위에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반대운동을 불러 일으켰고, 민주화 운동의 분위기와 맞물려 엄청난 규모로 커졌다. 그러자 정부는 비행장 설치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이에 1990년대 이후로는 알뜨르 일대를 전쟁 유적지로 관광자원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되어 왔다. 한때 제주도 당국에서는 이곳에 국방기념관을 세우겠다, 일제 전적지로 복원하여 관광 명소로 활용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잔존 유적에 대한 조사 및 보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방기념관 같은 전쟁놀이의 기억 장소로 활용되는 것은 못마땅할뿐더러 선불리 상품화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려는 <모슬포 전적지 공원 조성 사업>이 구상되었다. 이 공원은 일본군이 남겨놓은 군사시설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여 평화를 테마로 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유적지로는 대공포진지 4개소, 방공호 2개소, 격납고 20개소, 어뢰정보관소 15개, 지하 병커, 4:3 학살터 등이 복원되며, 유도로·활주로·관람루트 조성 등이 정비될 예정이었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관, 기념관, 전쟁체험관, 위령탑, 기념조형물, 교육실, 시청각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애초에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1,000 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정보다 늦은 2008년 4월 기본계획안이 나왔으며, 그 내용도 전시관·기념관·전쟁체험관 등을 짓지 않고, 기존 군사시설을 정비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예산도 절반 이하인 485 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사업부지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사업부지 소유 주체인 국방부가 줄곧 부지 제공을 거부해 왔다. 제주도 당국이 강정에 해군기지 건설을 수락하면서 대신 이 지역 부지를 제공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2011년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에 따라 알뜨르 비행장 부지(185 만㎡)를 무상 또는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방부로부터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까지 제정했으나, 국방부가 요구한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2012년 “알뜨르 비행장은 현재 항공기 훈련장으로 사용 중이고 향후 한국 방공식별구역 내 24시간 탐색구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군 남부 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알뜨르 비행장 양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된다. 남부탐색구조부대는 ‘공군 전략기지’나 다를 바 없다.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한 뒤 알뜨르에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강정과 대정을 거점으로 제주도가 군사적 요충지화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제주도는 일제 군사시설들을 등록문화재로 신청함과 함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아야 한다. 양여받기 위해서는 탐색구조비행부대가 들어설 수 있는 대체 부지를 내놓아야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모양새다. 그런 가운데 서귀포시는 2018년까지 총사업비 80 억원을 투입하여 ‘다크투어리즘’을 추진한다고 2014년 12월 28일에 밝혔다.

한편 1990년대 들어서며 알뜨르 비행장과 연계되어 있는 송악산 일대를 개발지구로 지정하여 민자 유치 개발에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적극 나서게 되었다.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면서까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지방정부(제주도와 남제주군)는 1999년 12월 30일 개발 사업을 전격 승인하였다. 그러나 2001년 2월 사업자 측 간부들이 외자 유치 관련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사법 처리되면서 개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다. 결국 제주도는 2003년 송악산 관광지구 지정을 해제하였다.



송악산 일대는 2010년 우근민 도정을 거치면서 이번에는 중국자본 개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중국 자본에 종속되는 지역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그 비경을 특정 업체가 독식한다는 ‘경관 사유화’ 논리를 주장하며 개발을 반대했다.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는 2014년 10월 중국 자본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조건부 심의 의결하여 사업 추진의 길을 열어준 상태다. 중국 자본 ‘신해원 유한회사’는 5,500여억원을 투자해 송악산 일대 19만 1,950㎡에 호텔과 콘도 등 리조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환경단체 등은 “송악산은 개발보다는 보존해야 할 제주의 자산”이라며 ‘개발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조기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원희룡 도정이 송악산 개발 사업을 최종 승인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 Ⅲ. 알뜨르 비행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 1.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해야겠다

알뜨르 비행장 일대는 1930년대부터 태평양전쟁 시기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조성한 다양한 군사시설이 남아있다. 일제 군사시설은 비행장 활주로와 격납고 및 콘크리트 지하벙커, 통신시설, 고사포진지, 오름 지하의 거대 지하호 등 비행장 관련 시설들이 집중돼 있다. 여기에 알뜨르 비행장 및 송악산을 중심으로 해상(자살)특공기지와 거대한 지하 동굴진지 등이 구축돼 있다.

알뜨르 비행장은 중국대륙 공격을 위해 1930년대 초부터 구축되기 시작, 중국 남부를 폭격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됐다. 이후 태평양전쟁 시기까지 3차에 걸쳐 확장되면서 본토 결전에 대비한 결(決)7호 작전을 위한 작전기지로서 중요시됐다. 제주도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와 중국,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여러 나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전쟁유산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알뜨르 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일제 군사시설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을 구상해 나가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알뜨르 일대는 해방 후 국방부 소유지로 전환되면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전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다. 특히 알오름 내부의 미로와

같은 동굴진지가 옛 모습 그대로 잘 남겨져 있다. 일본 방위청에 소장된 이 지역 관련 지도를 보면, 알뜨르비행장 일대 군사시설 배치 상황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또한 일본군이 남긴 「제주도항공기지 위치도」에는 알오름 내부의 군사 시설 배치까지 잘 그려져 있다.

알뜨르 비행장 일대 일제 군사시설은 일제 침략상을 보여주는 역사 교훈 현장으로서 문화유산의 가치가 인정되어 2002년 비행기 격납고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모두 13곳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돼 있다. 또한 알뜨르 비행장 주변에는 비등록 일제 군사시설들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알뜨르 비행장 일대 군사시설은 어두운 과거의 잔재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는 역사 교훈 현장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보존·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과 민간부문(전문연구기관과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상호 협력 아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나가야 한다.

## 2. 알뜨르에 대한 자결권(自決權)을 세워야겠다

알뜨르 비행장에 해군기지에 이은 공군기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속명처럼 다가오고 있다. 알뜨르 비행장은 역사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되찾아야 하는 서글픈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주권은 주민들이 직접 행사해야 함이 마땅하다. 국가의 소유지라고 하여 지역 주민의 애환이 서려있고 주민들이 지금도 (빌려서라도) 경작하는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키나와와 타이완의 아이덴티티, 자치권·자결권에 못 미치는 특별자치도 제주의 현실을 직시하고 향후 미래비전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시민사회로부터 주민자결 등 대안운동 준비를 서서히 해나가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여겨본다.

## 3. 알뜨르로부터 동북아 평화벨트를 이어나가자

2005년 1월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각 분야별로 평화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에서의 평화 개념은 ① 경관(자연, 환경)과 평화 ② 역사문화적 자치 공동체로서 섬과 지역의 평화, 곧 자치와 평화 ③ 4·3과 평화, 곧 집단학살의 경험과 평화 ④ 군사적 요충지로서 평화, 곧 전쟁과 평화 ⑤ 정상회담지로서 평화, 곧 외교와 평화 ⑥ 해군기지 건설과 평화, 곧 군사력과 평화 등으로 크게 나누어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제주도에는 외교안보에 중점을 둔 평화연구원과 집단학살과 인권(현대사)에 중점을 4·3 평화공원 및 4·3 평화기념관이 공존하고 있다. 향후 제주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과거 전쟁 요충지역을 둘러싼 ‘평화’ 개념에 대한 학술적 검토 분석 및 사회적·국제적 합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에는 일반적으로 타국의 유적이 많으며, 또한 전쟁요충지는 대부분 평화 시 타국과의 교류와 협력의 가교이자 현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북아가 역사평화벨트로 서로 연결되어 기억 기념된다면 전쟁 유적지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평화의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동북아 평화벨트(지대) 구축에서 제주도의 역할이 충분히 있을 것이며, 알뜨르가 심장부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4. 후세 교훈의 장으로 활용해야겠다

알뜨르 비행장 일대는 일제가 일본 본토를 지켜내기 위해 제주도민을 볼모로 삼아 옥쇄(玉碎)하겠다고 했던 7호 작전의 결과물이다. 또한 제주도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노역을 했던 피와 땀이 어린 역사적 현장이다. 일제의 전쟁 유산이라고 해서 무시해 버려서는 안 될 역사 교훈의 현장이다. 일제 침략상을 보여주는 전쟁 유산이자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역사 교훈 현장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은 물론 제주를 찾는 여행객·답사객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곳이다.

앞으로 후세대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다크 투어리즘의 방향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크 투어리즘은 전쟁이나 학살 등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며 깨달음을 얻는 여행이다. 대규모 시설보다는 알뜨르 비행장 일대의 원풍경을 살리면서 격납고와 고사포진지, 지하병거, 지하 진지 등 알뜨르 비행장 일대의 다양한 군사시설을 접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고려한 답사코스를 개설하고, 가이드북 등을 발간하여 답사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 5. 알뜨르 가치의 보편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향하여

알뜨르 비행장과 주변 군사시설은 태평양전쟁과 관련된 전쟁유산으로서 세계적 규모와 중요성을 보여준다. 단일 비행장 시설로서 알뜨르 비행장의 격납고 수는 일본 본토와 비교해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알뜨르 비행장 일대는 전쟁 유산의 다양성 면에서도 매우 주목된다. 알뜨르 비행장은 주변 일대에 지하 병커와 방공호시설, 통신시설, 고사포진지, 거대 지하호, 해상특공기지 등이 분포하고 있다. 반경 1km 이내에 태평양전쟁 관련 군사시설이 이처럼 다양하게 집적돼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드물다.

알뜨르 비행장은 중국 대륙 폭격을 위한 도항 기지이자,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결 7호 작전을 위한 기지로 실제 사용됐다. 제주도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와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와 미국과 연관된 태평양전쟁 관련 시설물로서 세계 전쟁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알뜨르 비행장 건설 과정에서는 제주도민을 비롯하여 다른 지방 민간인들까지 동원됐다. 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혹독한 노동을 해야만 했다.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 침략전쟁의 실상과 함께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역사·평화 교육 현장으로서 의미가 크다.

알뜨르 비행장 일대 등록문화재 군사시설을 포함한 제주도에 남겨진 태평양전쟁 시기의 유산에 대해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평화유산으로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알뜨르 비행장 등 제주도 전쟁유산(평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함으로써 일제 침략전쟁과 실상을 영구히 기록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역사 교훈 현장으로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도 이만한 태평양전쟁 유적이 드물기 때문에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일본군 시설 등과 연계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알뜨르 비행장 일대의 다양한 유산들을 보편화 하는 작업은 한·중·일 3개국의 역사 인식의 차이를 좁혀 미래의 동아시아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한 글>

조성윤, 「지역 주민 운동의 논리와 근대화 이데올로기 : 제주도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97, 2005.

한국관광공사, 알뜨르, 그 아름다움 속의 낮설음, 2007.

박경훈, 알뜨르에서 아시아를 보다, Seeing Asia at altteureu, 각출판사, 2010.

조성윤, 「알뜨르 비행장 : 일본 해군의 제주도 항공기지 건설 과정」, 탐라문화 41, 2012.

제주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제주민주화운동사, 201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역사문화진흥원, 알뜨르비행장 일대 일제 군사시설 등록문화재 정밀조사 및 기록화 연구, 2014.

허호준, 「도처에 구축된 일본군 요새, 그곳엔 제주도민의 피눈물이」, 한겨레신문 2015. 8. 19.(기사)

##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군사 전략과 제주해군기지

정 옥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1. “제주해군기지는 중국에게 가장 큰 위협”

“(제주해군기지의)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명하게도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침묵을 지켜왔다. 또한 앞으로도 침묵을 유지해야 한다.”

미 해군의 한 장교가 미국 육군 대학원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내용이다. 데이비드 서치타(David J. Suchyta)는 2013년에 이 대학원에 ‘제주해군기지 동북아의 전략적 함의(Jeju Naval Base: Strategic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서치타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제주해군기지의 전략적 함의를 자세히 분석하면서 미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침묵’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침묵이 깨지고 말았다.

2013년 9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주한 미 해군사령관을 지낸 리사 프란체티 준장은 6월 5일 이임식 자리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 영문판에 따르면 “미 해군은 한국의 남쪽 휴양지인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즉시 항해와 훈련을 목적으로 함선들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이다. 프란체티는 “미 해군 7함대는 진심으로 한국의 항구 방문차 함정들을 보내기를 좋아한다”며, 미군이 제주해군기지를 비롯한 어떤 항구라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면, 한국 해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 해군의 항해의 자유와 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으로 한미일 3각 동맹에 장애물이 조성되고 있다며, 한미일 3자 군사훈련은 3자간 협력 강화를 위한 “좋은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미군의 고위 관계자, 특히 주한 미 해군사령관이 제주해군기지의 이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만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발언이다.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앞서 언급한 서치타의 보고서 내용이다. 비록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미 해군의 제주해군기지를 바라보는 시각의 일면이 잘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미국은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나는 “한국이 자신의 방위 부담을 더 많이 지려는 것을 계속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경기의 후퇴 및 재정난, 그리고 아시아 재균형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 강력한 한국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제주기지 건설로 가장 위협을 받을 나라는 중국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위협 대처를 해군기지 건설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서치타는 제주기지 건설로 가장 큰 위협을 받을 당사자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에게 커다란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밝힌 이유는 아래와 같다.

“제주해군기지는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과 중국의 무력 충돌 발생시 일본을 지원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 동부 대륙붕의 약 70%는 서해와 동중국해에 있다.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는 미국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은 남쪽으로 향하는 중국의 북해함대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동해함대의 측면을 공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서치타는 동아시아에서 무력 충돌 발생시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의 숨통을 막을 수 있는 전략적 포인트로 간주한 것이다. 그렇다면 데이비드 서치타는 왜 미국이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할 걸까? 그는 “중국이 과잉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우려했다.

“중국은 이전부터 한국이 탄도미사일방어체제(BMD)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잘 다뤄지지 않으면(미국이 제주기지를 사용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역자 주), 제주기지는 중국을 자극해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증강하고 그 결과 동북아 군비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

## 2. 중국이 제주해군기지를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국이 제주해군기지를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서치타의 분석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서치타는 먼저 “제주해군기지가 북한을 자극해 지역적 안정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해군기지는 북방한계선(NLL)으로부터 약 300해리 떨어져 있고, 평택과 목포에 주둔하고 있는 한

국 함정이 북한과의 해양 경계선 분쟁에 훨씬 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는 북한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 전대로부터 봉쇄, 고립, 공격당할 수 있다는 전략적 두려움으로 인해 제주해군기지를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주도가 중국 경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서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대한해협이 합류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중국으로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는 서해 봉쇄이다. 이는 일본 열도에서 필리핀까지 이어진 ‘제1 도련선’과 밀접히 연관된다. 서치타는 중국은 오래 전부터 유사시 제1 열도선이 봉쇄될 것을 우려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제1 열도선 북쪽에 해당되는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혹은 미국) 해군이 칭다오, 다롄, 루쉰, 홀루다오 등에 주둔한 중국 해군의 활동을 옥쇄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의 해양수송로 봉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텐진, 칭다오, 다롄, 보하이만 등 중국의 주요 항구는 제주도 옆을 지나는데, 제주해군기지의 잠수함은 마치 단두대의 칼(guillotine blade)처럼 중국의 해양수송로를 괴롭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과의 무력 충돌 발생시, 중국이 미국 항모전단으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서치타는 이러한 중국의 우려는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전 직후 미국의 조지워싱턴호가 서해에 진입하면서 더욱 짙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이 중국 인민을 위협하고 중국의 최종 결심을 시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서치타는 “제주해군기지가 항공모함을 정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중국의 이러한 우려를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항모 전단의 전투 반경이 500해리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에 정박한 미국 항모는 5시간 이내에 베이징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우려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대만 통일을 국시로 삼고 있고, 대만 독립 저지를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제주해군기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함의를 지닌 것일까? 서치타는 “대만



해협 위기 발생시, 이 해협 전투에 참여하려는 중국의 북해함대는 제주도 및 여기에 주둔한 잠수함의 바로 옆을 지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제주해군기지의 전력은 (중국의 북해함대뿐만 아니라-역자 주) 남쪽 항구인 상하이와 딩하이에 주둔한 중국의 해군 함정의 작전도 괴롭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치타는 이처럼 중국이 제주해군기지를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특히 중국이 제주기지를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면” 지역 안정이 크게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3. 제주해군기지와 한미일 해상 MD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서치타는 ‘제주해군기지 사용 설명서’를 제안하면서 그 1 단계로 미군 이지스함의 기항을 제시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를 미국 주도의 한미일 해상 미사일방어체제(MD)의 기항지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은 세 나라가 보유한 이지스함을 기반으로 해상 MD 체제를 만들기를 원한다. 일본은 이에 적극 동의한 상황이고, 한국도 이명박 정부 이후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 한미일 3자 해상 MD 체제의 일환으로 이용될 공산이 크다.

제주해군기지가 한미, 혹은 한미일 MD용 기지로 이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면 군당국은 물론이고 많은 군사전문가들도 손사래를 친다. 우선 해군은 “제주기지에 정박할 이지스 구축함은 요격 능력이 없어 MD 편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현재 보유한 이지스함에는 SM-3 미사일이 아닌 SM-2 계열의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8월 현재까지 한국 해군이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이 SM-3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것도 곧 미국 MD로의 편입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일동맹은 한국이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추적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로도 MD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미 양국은 오키나와와 괌까지 MD 작전 범위를 넓히기로 했고, 한미일 3자 MD도 추진 중이다.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그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지도를 펼쳐보면 알 수 있듯이 제주도 인근 해역은 오키나와와 괌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 시도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또한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체제(ABMD)'는 이동식 해상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대만해협 위기 발생시 대만 방어를 위해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노무현 정부 때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한 핵심 목적이 양안 사태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나, 일본이 필요할 경우 자국의 이지스함을 서해 남방에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은 이러한 우려가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제주해군기지를 더더욱 미국 해군 및 MD와 연관시켜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이지스함에 SM-3를 도입·장착해 오키나와나 괌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제쳐두더라도, 미국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를 ABMD의 중간기지로 활용하고, 한국 해군이 미국과 일본의 MD 작전에 정보 제공 등 공동 보조를 맞춰나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 4. '일시 기항'이라 문제가 없다?

리사 프란테티 주한 미 해군사령관이 이임식에서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자,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들은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용 기항지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그러자 해군은 8월 13일 입장 자료를 통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동맹국인 미군 함정이 제주민군복합항에 일시적으로 기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시 기항은 중국, 일본 등 어느 나라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해군 함정도 청해부대 작전, 사관생도 순항훈련, 림팩훈련 기간 중 외국 항구에 기항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한국의 군사기지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해군은 미군의 제주해군기지 기항 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를 펴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 하나는 사전 동의를 문제이다. 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든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법적 의무가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여(許與)하고 미국은 수락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조약에 따라 체결된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는 "(미국의) 선박과 항

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나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제10조 1항)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10조 2항에는 주한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간을 이동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하나는 군사적 긴장 고조나 무력 충돌 발생과 같은 유사시 기항의 문제이다. 중국이나 일본이 누군가와 군사적 대결 상태에 있다고 해서 제주해군기지에 기항할 것이라곤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이 동의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국에게 통보하고 제주해군기지에 기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5. 서치타의 ‘제주해군기지 사용 설명서’

그렇다면 미국은 제주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사용할까? 프란체티 준장은 그러고 싶다고 말했다. 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은 기항지가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SOFA 규정에 따라 미국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제주해군기지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마음껏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하기에는 미국에게도 크게 두 가지 부담이 따른다. 하나는 한국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고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다는 우려이다. 또 하나는 중국을 자극해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트 서치타 미 해군 장교의 보고서에는 주목할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해군기지의 민감성과 전략적 함의를 분석한 서치타는 미국의 제주해군기지 사용 방안을 자세히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는 1단계로 미국은 “한국의 초청을 받아” 중간 규모의 함정인 이지스함부터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정도 규모의 함정은 “한국을 지원할 의사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하고 중국을 자극할 만큼 크지는 않다”는 분석에 기초한 제안이다. 또한 이지스함의 정박 기간은 3일을 넘지 말아야 하고, 미 해군 장병들은 강정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한 미국 이지스함은 상하이 등 중국 항구도 방문해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켜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치타는 다음 단계로 “중소형 함정을 미 해군이 인천항을 방문하는 수준으로 제주해군기지에도 정기적으로 기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중국이 이를 미 해군의 증강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미국은 서해에 진입하는 전체 함정 숫자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가장 주목해야 할 미국 항공모함의 제주기지 입항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은 이를 “미국의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서치타는 “미국 항모의 제주기지 입항은 서해 중심부에 진입하는 것보다는 중국에게 덜 도발적으로 비춰지겠지만, 부산항이나 일본 사세보항에 입항하는 것보다는 중국을 더 자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해 “미 항모의 제주기지 입항은 미래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소통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게 서치타 제안의 핵심 골자이다. “미 항모의 제주 입항은 중국의 주의를 미묘하게 끌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와 같이 적절한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아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센카쿠/다오위다오, 혹은 대만해협에서 위기 발생과 같은 상황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항모의 제주 입항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이후 제주 남방 해역에서 한미, 혹은 한미일 합동 해상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 역시 주목된다. 2010년 7월 한미 양국은 이지스함을 동원해 합동 해상 MD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후로 2012년부터는 매년 두 가지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하나는 한미일 세 나라의 함정과 항공기가 참여하는 수색·구조(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 훈련이고, 또 하나는 ‘태평양의 용(Pacific Dragon)’이라는 3자 해상 MD 훈련이다. 지금까지 미국 해군은 부산항을 주로 기항지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2016년 제주기지가 완공되면 강정마을로 기수를 돌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제주 남방 해역은 민감한 곳이다. 한국의 핵심적인 해상교통로가 이 지역을 지난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을 둘러싼 갈등도 있다. 또한 2013년 11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와 뒤이은 한국의 구역 확대가 맞물리면서 한중일 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는 잇을 만하면 이 지역을 가로질러 한국에 와서 모조 폭탄을 떨어뜨리고 광으로 되돌아가곤 한다. 아울러 이 지역은 중국 심장부로 가는 관문(choke point)이자 중일간에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와 가까운 곳이다. 이러한 곳

에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우리에게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 6. '타자화'되는 대한민국의 운명

필자는 오래 전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면, 한국에겐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더 많은 기항지를 원하는 미국과 반접근 전략을 구체화하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딜레마가 격화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보수 언론은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에게 위협으로 간주되어 한중 관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평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국내 비판론자의 주장을 '근거 없다'고 일축해왔다. 그러나 미 해군 장교인 서치타의 보고서 내용은 국내 비판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필자를 비롯한 제주해군기지 비판론자들은 이 기지가 건설되면 미국도 사 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정부와 군당국은 이 역시 일축해왔다. 그런데 서 치타는 미국의 제주해군기지 이용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자세히 분석했다. 얼마 전까지 주한 미 해군사령관을 지낸 리사 프란체티 준장은 공개적으로 제주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삼고 싶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급격히 타자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국 해군을 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라는 '주권적 결정'이 미중 갈등 구조에 서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의 판단에 넘어가는 '비주권적 결과'를 잉태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걸 먼 훗날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직면할 수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은 미국의 사드(THAAD) 한국 내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 중관계에서 흥역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여기에는 경쟁 관계에 진입한 미국과 중 국 사이에 낀 한국의 지정학적 딜레마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탓도 크다. 더구나 사드 논란은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의 군사 전략 및 한 반도 정세 변동에 따라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이다.

이처럼 사드 문제를 풀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말 완공을 앞둔 제주해군기지는 우리에게 얹힌 데 덮친 격이 될 공산이 크다. 함정 규모와 숫자, 그리고 횡수는 유 동적이지만, 미 함정이 제주기지에 기항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반(反)접 근 전략에 골몰하고 있는 중국도 어떤 형태로든 이에 맞대응하려고 할 것이다. 미

함정을 못 오게 하면 한미관계가, 오게 하면 한중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해군기지는 우리에게 전략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도, 별 관심이 없다가 정치적으로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임기 막판에 공사를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도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별로 심사숙고하지 못한 것 같다. 결국 제주해군기지가 품고 있는 전략적 딜레마는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 한다.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제주기지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에 귀를 기울이는 데에 있다.

잠시 눈을 감고 제주와 한국의 앞날을 생각해본다. 기어코 기지가 들어선다면, 그건 문제의 끝이 아니라 더 큰 시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미군 함정이 강정마을 앞 바다에 출현한다면, 아마도 현지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저지 활동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하려고 할 것이다. 평화로웠던 땅 강정은 영원히 평화를 잃게 되고, 그 대가로부터 대한민국도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걸 먼 미래에 있을 기우가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다.

## 동아시아국제연대활동과 향후 방향

구 중 서 (기지네트워크 대표, 평화바람)

한국에는 각종 연대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나 대안을 모색할 때 연대체가 만들어지고 활동을 한다. 이런 연대운동은 운동의 확장성을 도모하고 만들어져 활동을 한다.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운동에서 연대운동의 한 방향을 일으킨 사건이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라는 생각을 한다. 연대운동은 기본적 감수성을 전제하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연민, 고통에 대한 감성, 현실에 대한 공감 등등을 기본으로 행하여진다. 모든 연대 운동이 그렇다고 할 수 없다. 때론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존재 한다. 서론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연대에 대한 개인적 시각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또한 우리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국제연대의 핵심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출발해서 상호연관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정보를 분석, 공유하는 일이다. 국제연대는 하나의 상황을 해당국가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가져오는 주변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시아에는 엄청난 군비경쟁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제주도 강정의 해군기지건설 - 오키나와 헤노코 미해병대 기지확장건설 -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확장 - 일본안보법제화 - 중국의 핵항공모함건조와 운항 등등 각 나라에서 보면 기지 건설이고, 확장이고, 군사무기증가이다. 그러나 더 자세히 보고, 분석을 하면, “미국의 아시아로 회귀”(웬디 셔먼 연설 -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미국의 군사정책, 한국의 군사정책, 일본의 군산정책, 중국의 군사정책을 함께 볼 수 있는 시각은 바로 정확한 정보에서 출발한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문제점을 알고, 각자의 위치에서 대응하고,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힘을 합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기지평화네트워크(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평화바람), 녹색연합,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모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는 2007년 평택 대추리투쟁을 통해 경험한 연대와 전문성 군사주의 대응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연대활동은 한국, 일본, 오키나와에서 년 1회 '동아시아미군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하 국제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은 8회 국제심포지엄 한국(서울)에서 진행을 한다. 국제심포지엄은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의 활동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발표, 미군의 환경문제, 새로운 기지건설과 투쟁 등의 발제와 토론 특별보고를 통해 각국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매년 5월 오키나와 5.15평화행진에 한국에서 참가단을 모집하여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국제연대 대상국가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투쟁현장을 보고 배우는 것이다. 그 국가의 투쟁방식, 투쟁의 지속성, 투쟁의 역사 등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투쟁을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영감을 얻는 기회이기도 하다.

동아시아 군사주의 군비경쟁의 문제는 결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각 나라의 민중들이 언제든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국제연대는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막고자 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의 연대를 넘어 아시아 연대로 더 나아가 세계로 세계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제연대를 단순한 하나의 운동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운동의 가치로 세력을 확장 할 필요성이 있다.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단순하게 그 나라의 군사력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 민중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연대의 가장 큰 장애는 언어의 문제인데 이를 국제연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극복해야 하는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 중 장점을 찾아 연대를 하면 된다. 사람에 대한 애정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접하면 된다. 내가 처한 현실과 상호연관관계를 통해 옆 나라에서 발생하는 일이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관심을 가지며 실천하는 것이 국제연대라고 생각한다.

기지평화네트워크는 일본, 오키나와에 국한된 비대칭적 연대활동으로 국제연대를 하였지만, 일본, 오키나와와 국제연대를 하면서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상상력을 키웠고,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해석하는 눈을 키웠다.

국제연대는 좀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인간 대 인간의 협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본다.



## 기지반대 동북아시아 연대활동에 대해서

아시토미 히로시 (헬기기지반대협의회 공동대표)

1. 현재까지 동북아시아의 연대와 관련해서 활동해 온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1999년에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윤금이씨 추모제에 오키나와에서 참가한 33인의 일원으로서 처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오키나와 파견단이 지닌 의미는 미군범죄에 고통을 겪고 있는 오키나와와 한국 민중 모두가 함께 하는 연대활동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 오키나와의 5.15 평화행진에 한국에서 평화운동 활동가들이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오키나와 - 한국 연대의 입장에서 교류를 심화해 왔습니다.

2005년 9월 평택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미군기지 반대 국제심포지움>에 초대되어 오키나와의 헤노코 투쟁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키나와에서도 2006년 2월에 <동북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심포지움>을 조직하고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 8월에는 <조선반도를 다시금 전쟁터로 만들지 마! 휴전협정 60년. 반전 평화국제연대행동>에 초대되었습니다. ‘조선반도(한반도)의 분단을 군사적으로 고정화하고 있는 것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라는 것 때문에 한층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민중 연대와 공동투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2014년 5월의 제주도 강정활동가가 5.15 평화행진에 와서 함께 했던 축제에서, 동북아시아 섬들의 <비무장 평화의 섬 연대>를 강하게 호소했던 것에 강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2. 이 컨퍼런스 이후, <동북아시아> 소위원회 참가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보려 합니다.

오바마 정권이 펼치고 있는 <아시아 회귀> 전략의 결과, 한국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본격 착공해서 행하고, 오키나와에서도 MV- 22 오스프레이의 후텐마 기지 배치가 강행되었습니다.

오바마 정권의 태평양전략이 동북아시아의 환경, 인권, 평화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각국에 있어서 미군전략에 동의하는 정권과 대항하는 민중의 연대행동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평화구축의 주체는 우리 주민들입니다.

3. 시간이 있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금후 동북 아시아의 연대를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오키나와와 제주도의 <비무장 평화의 섬> 구축을 향한 지원, 연대활동을 민중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의 평화교육 사명

박 동 호 신부 (서울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 1. [편의상] 한국교회 안팎의 평화교육

#### 1-1 한국교회 안에서의 평화교육

##### 1-1-1 광의의 평화교육

-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의 적극적 활동의 필요성  
(한반도의 평화, 역내 평화, 세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목의 지향)  
예) 춘계, 추계 주교회의의 의제 가운데 하나로서, 한반도의 정세, 특히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매년 천명한다.
- 신학교 및 수도자 양성과정에서의 사회교리와 평화 및 생태교육의 급박성  
교회와 세상의 관계  
세상 안에서 교회의 사명  
평화학교(신학교, 교리신학원, 가톨릭대학교, 서강대학교...)  
예) 신학생, 수도자, 사제를 대상으로 하는 ‘평화론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그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예비신자 양성과정에서의 평화교육의 필요성  
사회교리의 미흡(예비자 교리서)  
성경해석의 ‘사유화’와 ‘탈공동체화’, ‘내재화’와 ‘탈역사화’
- 주일학교 및 교회생활 일반에서의 ‘평화’ 및 ‘정의’의 감수성 제고
- 후보 및 ‘새로운 매체’를 통한 ‘평화’, ‘전쟁의 참상’, ‘불평등’ 인식제고

##### 1-1-2 협의의 평화교육

- 평화의 부재 및 실패인 전쟁(폭력)의 실상 고발(국내외)
- 군수산업과 경제적 이익/인간과 사회의 황폐함의 대조(국내외)
- 평화의 근본원인인 (정치, 경제, 문화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자각

#### 1-2 한국교회 밖에서의 평화교육(연대활동)

##### 1-2-1 국내외 평화운동기구와의 연대 및 활동 사례 소개

- 1-2-2 국내외 평화활동 및 전쟁의 참상을 소재로 하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예) 영화 ‘시코’, 교육방송이나 JTBC의 짧은 ‘동영상’
- 1-2-3 국내외 초중등학교 교과과정 전문가들, 대학의 인문학자의 교류 모색

## 2.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의 평화교육

2-1-1 ‘강정’ 및 제주가 (문화, 사회, 역사 속에서) 실현한 ‘평화의 삶’과 사회교리  
인간의 존엄함.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

재화의 보편목적,

사회적 약자 우선,

참여와 책임의 원리에 따라 분류하여 체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1-2 진리

자유

정의

사랑의 가치에 따라 분류하여 체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여러 전달 수단(평화 교과서, 동영상, 음악, 미술, 영상....)을 활용하여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2-2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의 이름에 맞게, 프란치스코 교종의 두 문헌

2-2-1 『복음의 기쁨』에서, 교회의 사명 즉,

복음화의 사회차원, 평화의 다른 이름인 ‘참된 발전’을

2-2-2 『찬미받으소서』에서, 통합적 생태론에 기초한 대화와 새로운 여정을 ‘강정 및 제주’에 적용함으로써 ‘평화’교육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자치적 평화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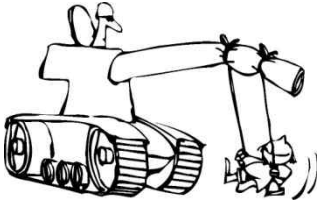
제주의 역사와 평화와 폭력과 극복 과정을 소개할 수 있는

강정주민, 제주 시민 자원봉사자, 제주 사제의

양성(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활동

예) 박물관 및 유적지 시민해설가, 숲 해설가...

## 평화 패러다임과 평화국가 만들기



이 태 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1. 평화로운 세상은 가능한가?

#### 1) 변화하는 세계

○ 화십일홍花無十日紅, 만물유전萬物流轉 - 지난 30 년

- 1989 베를린 장벽 붕괴 vs. 2009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신자유주의 위기
- 1991 년 소련 연방 해체 vs. 2011 월가 점거시위
- We are the People(1989) vs. We are the (99%) People(2011)

○ 이기적 유전자 vs. 이타적 유전자

- 협동과 연대가 세상을 발전시키는가? 이기심과 경쟁이 세상을 발전시키는가?
- 흡혈박쥐는 자신의 약한 동료에게 자신이 구해온 피를 나눠준다.
- 적자생존의 재해석 : “이기적인 개인은 이타적인 개인을 이기는 반면, 이기적인 집단은 이타적인 집단을 이길 수 없다.” - 에드워드 윌슨

cf. 상리공생(mutualism, 相利共生) : 서로 다른 종의 생물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경우를 말함

- 1990 년대 초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수전 시머드가 이끄는 연구진은 숲 생태계에서 균근(균류와 뿌리의 협동)을 통한 나무 사이의 자원 전달을 측정하였다. 자작나무와 전나무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관찰한 결과, 놀랍게도 햇빛을 받은 자작나무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늘진 곳의 전나무에 당을 공급하고 있었다. - 조홍범, “숲은 협동한다”, 살림, 2014. 6 월호

## 2) 악순환의 고리

### ○ 신자유주의 위기 그 후

- 생명과 평화, 민주주의와 정의의 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극단주의, 군사주의, 빅브라더(통제), 1%만을 위한 사회로 가고 있는가?

### ○ 분단체제

- 53년 이후 정전체제가 공고화된 가운데, 남한은 대외의존도가 강한 시장경제, 북한은 고립적인 국가사회주의 경제로 발전
- 89년 이후 동구는 몰락했지만, 북한은 생존?, 고난의 행군 이후 통제 강화하면서 시장으로 편입 중
- 남한에는 87년 체제 형성, 북한은 내부개혁 지연
- 교차승인의 미완성(한-러중 O.K., 북-미일?), 성장하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증대
- 2000년 한반도의 봄(6.15, 북미코뮤니케, 북일수교선언)
- 그러나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냉각, 양측의 군사주의 강화
- 북한은 핵개발, 남한은 핵우산 및 한미 군사동맹 강화
- 김정일 사후 북한체제의 연속성에 대한 회의, 3대 세습에 대한 냉소적 시각 확대
- 북한/중국 위협을 빌미로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력 집중, 한미일 군사동맹 시도
- 이는 다시 동북아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 통진당 사건, 일베, 아베 정권, 넷우익...

## 3) 현실주의(군사주의)의 비현실성

### ○ 현실주의의 함정

-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시도되었지만 실패해온 배제와 억제 위주의 군사주의적 접근
-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를 종식시켰는가?
- '인권을 위한 전쟁'은 인권을 신장시킨 적이 있나?
- 핵보유국과 핵우산 의존 국가들의 비확산노력은 성공하고 있는가?
- 북핵 갈등 20년, 제재와 봉쇄는 성공했는가?
- 북한의 GDP 만큼 투자되는 남한의 군비는 북한의 군부를 굴복시켰는가?

- 제주남방해역에서 매년 해양구조수색훈련을 명분으로 전쟁연습을 하는 한미일 해군은 세월호 참사 구조에 쓸모가 있었는가?
- 배제와 억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동북아
  - 분단 한반도는 안보를 이유로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체제와, 한국판 네오콘으로 명명할 만한 편향적이고 냉전적이며 군사적 우월주의에 경도된 권력이 지배
  - 힘의 우위를 앞세운 남한의 대북 압박봉쇄정책과 무력시위는 도리어 북한의 핵개발과 권위주의적 통치에 변명거리를 제공 --> 한반도의 군사화
  -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일 지역군사 동맹을 가시화하는 구실로 작용 -->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화
  - 결국 한반도와 동아시아 주민들의 안전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역설.
- “유럽의 과거는 동아시아의 미래가 될 것인가?”
  - 대서양을 둘러싼 유럽의 패권경쟁이 지난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야기
  - 서구 기술문명을 일찍 수용한 일본도 같은 시기에 아시아에서 식민지 쟁탈전
  - 20세기 대서양 패권경쟁이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던 비극이 21세기 태평양에서 다시 반복될 것인가?
    - cf. 북한에 대한 남한의 우월감이 지닌 부정적 효과
    -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수준에서 남북 간에 갈수록 확대되는 격차
    - 이 격차는 북한 통치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남한과 주변국의 정책입안자들이 북한에 대해 보다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
    -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가중시켜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한반도 갈등의 원인이 모두 북한이 ‘불량국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 양 전가하는 일방주의와 이중적 기준을 정당화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
- Give Peace a Chance
  - 안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으로 강요되어온 정책수단들 대신
  -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 공포와 불신 대신 이해와 협력의 비전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 2. 평화 패러다임과 평화국가 만들기

### 1) 안보패러다임과 평화패러다임

	안보패러다임(군사화)	평화패러다임(탈군사화)
적 or 위협	민족.인종.종교.이념적 타자	배타.패권.우월.근본주의
방위 대상	국가, 국경, 민족	인간, 지역(R)-소지역(L) 공동체, 시민사회
추구 가치(이익)	국익, 자원.시장의 독점, 성장, 효율	인권, 지속가능성, 공동번영, 경제정의, 복지
행위자	남성, 안보 관료와 군인	양성(여성참여 확대), 공동체 구성원
위협해석, 판단	국가, 정부기구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는 시민사회조직의 참여
평화유지전략	힘(공포)의 균형과 군사동맹	상호의존(공동안보), 다자협력
평화유지수단	군비(소극적 평화)	예방과 치유, 협력과 지원
정당화. 통합수단	힘의 우위, 공포, 국가주의, 공리주의, 배타적 정체성	과정의 정의, 관용, 시민불복종, 평화적 생존권, 다중 정체성
적정 군비	절대억지, 절대방위	합리적 충분(비공격적 방어)
군사 윤리	과학기술의 군사화, 군수산업, 대량살상무기, 예외주의	과학기술(군비)의 윤리성 무기수출 제한, 핵실험 반대
정보접근	비밀주의, 정보통제	비밀최소화, 조기경보

### 2) 평화국가

#### ○ 평화국가 비전

- 시민이 주체가 되어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공동체
- 시민권의 시각에서는 국가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시민적 통제권이 실현되는 공동체



- 폭력의 성찰이라는 시각에서는 폭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숙한 성찰과 인식 심화가 법적 규범적 원리로 반영된 공동체
- '평화국가 만들기'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향한 시민운동이자 대안적 정책 프레임
- cf. 행위의 주체와 범위
- 평화국가는 발전된 시민국가, 평화국가만들기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의 참여에 기반
- 평화국가 만들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공동체와의 상생적.호혜적 연관관계 아래서 인식하는 주체들의 공동체를 지향
- 평화국가 만들기의 행위자는 안보관료나 통치자만이 아닌 사회구성원, 즉 시민 그 자신
- 안보 영역에서의 국가 독점의 해체를 요구, 위협.폭력.안전에 대한 시민 주권의 회복을 추구
- 변화의 범위, 연대의 범위를 일국을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세계로 확장
- 국경을 넘어서는 시민협력, 지구적 차원의 정부-민간 파트너십, 국제관계의 민주.정의 실현을 위한 기여와 참여

### ○ 평화국가 vs. 안보국가

- 평화국가 : 평화를 제일의 가치로 삼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정치공동체
- 안보국가 : 국가안보를 제일의 가치로 삼고, 안보를 명분으로 폭력적, 억압적 국가장치를 정당화하는 국가
- cf. 적극적 평화
- 전쟁 없는 상태를 넘어 구조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지향
-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구성원에 대해 또 다른 폭력이 저질러질 수 있음에 유의: 국가폭력, 사회통념상의 폭력(?), 문화적 폭력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음.
- '국가안보' 규범을 대체할 '안전한 세계 혹은 사회'를 위한 규범을 모색, 정착

### ○ 평화국가 개념의 특성

- 운동적 개념 : 평화국가는 국가가 수행 또는 관여하는 대내외적 폭력의 행사를

- 시민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최소화하는 국가
- 헌법원리에 따른 개념 : 평화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고 평화적 생존권을 권리론적 기반으로 하는 국가
- 논쟁적 과정적 개념 : 평화국가는 국가의 본질에 관한 근대적 사유의 전환을 통해 국가의 존재양식 자체를 바꾸어 나가려는 논쟁적 개념
  - cf. 목표이자 과정으로서의 평화국가
- 진정한 비전은 가치와 목표에 대한 지향을 잃지 않으면서 복잡한 현실을 부단히 그 지향 속으로 통합해나가는 힘
- 평화국가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구체화. 평화국가는 국가의 상이자 사회운동의 과정.
- 평화국가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 현실의 과제들을 평화적으로 재해석하여 정책과 행위의 목록들을 축적

### 3. 평화국가를 향한 시민행동 과제

#### 1) 대안적인 안보 인식공동체의 구성

##### ○ 안보에서 생명, 평화, 안전으로

- 안전한 세계(사회)를 위한 원칙과 대안으로 ‘안보’를 재규정
- 인권론, 생태주의, 페미니즘, 개발주의 비판, 위험사회 비판 등의 인식공동체들
  - > 위기, 위협, 안전, 폭력을 재규정 또는 재인식
  - cf. 포괄안보론과 인간안보론의 한계
- 포괄안보: 테러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한 국가대응을 강조(민주주의 후퇴 정당화), 국가가 안보의 주체와 대상
- 인간안보 : 안보의 대상이 국가에서 인간으로... 그러나 안보 주체는 여전히 국가. 환경.보건.빈곤의 안보화 우려

#### 2) 평화주의 헌법, 평화적 생존권, 평화권 실현

##### ○ 평화주의의 규범화

- 헌법이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침략전쟁 부인’, ‘방어를 위한 군사력 사용’, ‘문민통제’ 등을 규범화 법제화

- 평화적 생존권 역시 구체적인 권리로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
- △국가안보를 내세운 주민재산 수용, 징발에 대한 거부권 입법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확보
- 평택 미군기지, 제주도 강정해군기지, 기타 주민 동의 없이 공격적인 무기들이 배치되는 지역에서의 주민 불복종 운동 가능
- 기타 유엔에서 논의되는 개인적 집단적 평화권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

○ **평화헌법의 기본 요소들**

- 침략전쟁부인
- 비공격적 방어
- 군축 및 군에 대한 문민통제
- 비무력적 방법에 의한 국제공헌
- 분쟁의 사전예방, 평화적 해결  
cf. '평화헌법'의 유형
- 침략전쟁포기와 주권제한형 :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 침략전쟁포기와 비무장형 : 일본, 코스타리카, 파라오
- 침략전쟁포기와 전수방위형 : 필리핀, 한국
- 영세중립형 : 스위스, 오스트리아
- 비동맹군축형 : 구유고 등
- 사회주의 혁명 헌법의 침략전쟁부인형

3) **국가안보기구 민주적 개조와 시민참여**

○ **'안보전문가' 독점구조에 대한 도전**

- '안보기구'의 전문가주의, 정보독점.해석독점에 대해 위협인식의 민주화와 공동 결정, 군사부문의 문민통제 실현
- 안보전문가 아닌 평화전문가의 정책 참여 확대

○ **국방안보 정보공개 강화와 시민감시의 제도화**

- △국가기밀 관리체계의 민주적 개선, △국가안보 분야 예산지출의 투명성 확보  
△군사훈련과 기지건설에 대한 주민 동의, 군사시설의 사전사후 영향 평가

○ 위협해석과 처방의 민주화

- △공동체에 가해지는 위협의 내용과 수준, △위협 해소를 위한 물리적 수단 vs 협력적 수단 △동맹의 효과와 비용, 이익과 위험, △비공격적이고 합리적인 적정 군사력의 규모, △군비지출과 다른 사회적 지출의 기회비용 △국방안보에 대한 시민참여의 수준 등에 대한 공개적 합의도출

4) 군축

○ 선제적 군축

- ‘군축’은 동북아 평화정착, 남북관계 신뢰구축의 부산물, 사후과제로 여겨져 왔으나 이 논리와 순서도를 역전시켜야

○ 절대역지의 환상

- ‘공포의 균형’은 사실상 제압론
- 절대역지 전략의 공격성 : 상대편에서는 공격할 수는 없고 절대적으로 공격당할 수만 있다는 의미
- 합리적 충분성, 비공격적 방어 개념 도입해야
- 특히 한반도에서 △(핵)선제예방공격의 배제 : 소극적 안전보장, △보복작전(roll-back)에 따른 휴전선 이북으로의 군대전개 배제해야

○ 주변국 위협론의 문제점

- 모호한 위협, 위협의 실체나 방위전략에 대한 합의 부재
- ‘중국위협론’에 따른 대미편승 지역동맹론 :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장점을 도리어 지정학적 위협으로 만드는 패착
- ‘군비투자’보다 ‘관계지향적인 안전보장정책’ : 다자협력과 평화외교를 근간으로 하는 호혜적 근린정책의 정립 선행

○ 군대의 해외파견 배제

- 지구적 차원의 무장 갈등을 심화시키고 동맹국 내부와 국제관계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패권추종 거부

- 특히 이중기준과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고 있는 ‘반확산·비확산 정책’, ‘자유의 확산 정책’, ‘봉쇄와 제재 위주의 갈등 대응’ 등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다운 비판

## 5)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맺기

### ○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통일 로드맵

- 북한 변화를 촉진하고 대비하는 대안적 원칙과 접근 필요
-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 군축과 병행
- 대북정책과 동맹정책의 상충 확대, 남의 독립성 제고하지 않으면 난망
-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평화적 대응기준과 원칙 마련. ex) "어떤 일이 있어도 남한군대가 휴전선 넘지 않는다."
- 민족공조, 중국위협론 등 민족주의 접근의 한계 직시

### ○ 남한 내부의 사회적 합의, 절차와 과정의 민주적 확립

- 정부에 대한 신뢰확보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의 공개, 초정파적, 범국민적 합의의 장을 마련
- 범국민적 합의기구 모색
- 냉전시대의 맹목적 대결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사회 내 민주적 시민의식과 평화지향의 확산 노력: 북한붕괴친미편승론, 북한추종민족자주론의 극복

### ○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정부-민간 파트너십 확대

- 민간 교류의 확대 : 남북 화해협력의 가교 역할 + 북에 대한 비판여론의 전달
- 북한인권 문제는 우월적·대결적 접근이 아닌 포용적·연대적·성찰적 차원에서 접근
- 한반도 인권 증진 차원에서 남북간 인권대화 필요 △인권의 정치화 배제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다면 협력 △갈등 예방적 접근 △분단과 남북한 인권의 상호연관성 유의 △남북한 상호신뢰구축과 병행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 6) 한미군사동맹의 대안 찾기

### ○ 단계적 해소

- 배타적인 군사 동맹 -->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다자간 관계로의 발전을 지향
- 동맹 대신 동북아 다자간 협력체제 추구

- 불균형적 무조건적 군사동맹 --> 양국의 헌법과 평화주의적 규범에 의해 통제 되는 '민주'적이고 '호혜'적인 동맹 --> 정치동맹

○ 비동맹.중립 넘어 평화국가의 주변국 협력체제 구축 지향

- 비동맹이 세력균형 개념이라면 평화국가는 시민국가구상  
cf.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 굳이 평화국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근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평화국가의 충분조건, 필요조건 아님
- 작전통제권 환수 후 '비공격적 방어'작전계획 독자수립해야 .
- 독자적이고 평화지향적인 군사독트린, 독자적인 방위개념의 정착, 비공격적인 군사작전계획의 수립(EX, 선제예방공격 배제, 유사계획의 평화적 기준 등)

7) 평화외교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개입

○ 외교의 윤리적 민주적 기준

- 인권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협소한 국익이 아닌 보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국익을 추구.
- 갈등에 대한 사후적 물리적 대응이 아닌 예방적, 평화적, 인도적 개입,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중시

○ 개발협력 강화

- 시장진출이나 경제적 영향력 확대, 군사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악용 배제
- 무상원조의 비율제고, ODA 규모 자체를 대폭 확대, 통합법 제정

○ 시민사회 참여와 다중트랙 외교

- '안보'분야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의 협력, 평화적 기여를 위한 정부.기업.시민 파트너십과 공동 가이드라인
- 비밀주의와 전문가주의 극복, 외교원칙.목표.추진 방향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과 민주적 의사결정 정착
- 시민국제협력을 위한 지원체계 확대 : 시민교육기관, 싱크탱크, 시민사회지원기금 등

cf.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과 동북아 시민네트워크

- 시민참여에 의한 예방 강조 : 국제기구, 정부, 시민사회의 책무와 역할을 지구. 지역(region).국가.지방(local) 수준에서 구체화된 실행의제로 공유
- 동북아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북한 제외, 베이징, 상해, 타이베이, 서울, 동경, 울란바토르, 홍콩, 블라디보스톡 등 9개 도시 50개 비정부기구가 참여

○ **활동가-전문가 네트워크, 역내 시민사회 지원체계 건설**

- 동아시아 시민사회 형성과 민주적 이행의 비전을 형성할 아시아시민교육기구, 아시아싱크탱크, 아시아시민사회지원기금(재단)

**8) 평화인지적 문화 형성과 평화 교육**

○ **평화국가 만들기의 시작도 끝은 결국 '의식'의 문제**

- 평화 인지적인 문화형성, 평화 감수성을 지니고 전파할 시민.활동가.지식사회의 주체의 형성에 의존

○ **역사적으로 형성된 전쟁분단국가, 난민문화에 대한 대안으로 평화 교육, 평화감수성 훈련, 평화인지적 문화와 제도 필요**

- 평화인지적 교과서, 평화인지적 매체의 발전
- 전쟁에 대한 기념, 승리의 기억--> 평화에 대한 성찰, 고통에 대한 기억과 연대로의 국가정책 변화 : ex, 평화발물관, '평화부' 신설
- 평화연구에서 학제간 협력과 현장의 활동가와 연구자간의 공동연구

○ **평화활동가의 육성과 훈련, 재충전**

- △평화활동가 교육 토론 네트워크의 형성, △언어능력 및 전문능력 계발 지원 체계, △청소년 평화 교육 행동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 시민평화 프로그램 개발
- TOT (Training of Trainers)

<보론>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3 가지 실천 과제

○ 제안 1. 한국 전쟁을 끝내자!

- 남한과 미국의 선도적 평화적 포용적 조치가 필수
- 핵갈등 해소, 평화체제 형성, 교류협력 증진의 결합
- 흡수통일론, 공격적 유사계획/전쟁연습 중지
- 합의의 존중, 대화의 복원, 포괄적 대화
- 민간의 역할 강화
- NLL 갈등의 평화적 해결(작은 평화협정)

○ 제안 2. 핵 없는 동북아

- 북한의 핵무장과 경제 병진 노선 수용불가
- 20 년간의 학습: 북한 핵무장과 제재의 악순환은 상호불신의 결과
- 접근법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북한의 핵무기고 증가, 확산우려 증가
- 북한의 핵포기와 한일이 의존하는 핵우산 포기의 교환
- 6 자회담과 합의된 별도 포럼들-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활용
- 국제 핵군축 논의와의 결합: e.g.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5 point-plan
- 핵 억제력에 의존하는 정책에 대한 일관된 문제제기.
- 후쿠시마의 교훈 확산: “내 이웃의 핵발전소가 국경 밖의 핵무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 반핵무기 운동과 탈핵운동의 결합

○ 제안 3. 태평양을 태평하게

-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의미
- 3 개의 소삼각축과 1 개의 대삼각축 : 한미일동맹, 미일호주군사협력, 미일인도 군사협력 -> 미일 중심으로 한/호주/인도의 큰 삼각축
- 협력과 변영 vs. 냉전시대보다 더한 군사주의와 국수주의
- 일본 평화헌법 수호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두 개의 축으로
- 동아시아의 섬을 평화의 섬으로: 제주,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괌, 사이판 주민의 평화적 권리
- △평화적 해결 노력, △무장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긴장고조의 예방, △지역의 협력적 노력을 통한 긴장완화, △시민사회의 이해와 교류 (GPPAC NEA 2012)



## 평화교육

박도현 수사 (예수회)

### I. 평화교육의 일반적 의미

평화 + 교육

#### 가. 평화

- 전쟁이 없는 상태
- 집단적, 개인적 폭력이 없는 상태
- 내적 평화(완전함)

#### 나. 교육이란

- 교육을 통한 인간 변화
- 장기적인 해결책
- 백년지대계

다. 전통적으로 평화교육은 “영토를 두고 벌어지는 조직화된 폭력”으로 규정되는 쟁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최근에 와서는 평화교육의 영역이 가정 내 폭력과 인간사이 폭력, 그리고 환경파괴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 전통적 교육은 일반 국민을 통제-억압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며 미화시켜왔다. 국익과 반공의 교육으로 구조적 폭력과 환경파괴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 역사교육을 통해 전쟁을 지지하고 전파시키려는 교육적 노력이 있어왔다. 그래서 평화교육은 기존 폭력적 사회구조를 비판할 수 있게 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상상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평화교육은 전쟁의 원인, 환경파괴, 국가안보상태, 국제관계, 인권, 지구적 문화 등을 망라한다.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화교육은 다양한 명칭을 달고 있는데, 인권교육, 환경교육, 국제교육, 갈등해결교육, 발전교육, 평화교육 등이 있다.

스탠포드대 Everett roger 의 연구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 사회에 전파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가 규정한 여섯 단계는 주의, 관심, 평가, 시도, 채택, 확인이다. 아이디어의 채택율은 그 아이디어가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아이디어에 비해 어느 정도나 이득을 가져다주는지, 그리고 새 아이디어가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신념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로저스의 연구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채택이 S자형 곡선을 보여준다고 한다. S자 곡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체 인구의 20%에 의해 채택된 때부터 절반 이상이 채택할 때까지 급상승한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체 인구의 20%에 의해 채택된 이후부터는 저절로 증가하는 말이다. 따라서 평화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 20%를 무력사용 포기와 비폭력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하는 데 있다.

## II. 평화교육에 있어서 유엔의 역할

유엔헌장의 원칙에 따라 유네스코는 1950년 전 세계를 통하여 학교에서 군축, 국제경제질서, 인권을 연구하기 위해 협동학교프로젝트를 개시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중등학교 교사 양성: 세계문제를 가르칠 능력을 제고
- 2) 학생교육: 세계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 3) 학생 스스로 해결능력 강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세계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능력을 제공
- 4) 효과적 교육방법과 교육자료 개발: 세 가지 주요 세계문제인 군축, 신국제경제질서, 인권을 가르치기 위한
- 5) 이 세 가지 세계문제를 개별 국가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지를 조명하고
- 6)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견해와 관점을 알아봄으로써 세계문제의 복잡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보다 용이하게 그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 III. 한국의 평화교육 개관

#### IV.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평화교육 계획안

1. 평화센터 주요사업계획 중에 ‘평화를 위한 교육과 영성’ 부분 계획
    - 평화를 폭 넓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배우는 평화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 영성적인 치유 - 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 및 치유와 상담활동
    - 평화에 관한 신학화 작업 (제주의 생명평화 신학화)
  - 가. 평화교육팀 구성 - 제주도 내외 평화교육전문가, 평화활동가, 제주역사학자 등 10 여 명으로 평화교육팀을 구성해 평화교육 연구, 실행.
  - 나. 치유와 신학화 작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 강정 평화 운동의 신학화 작업, 평화영성 프로그램 마련, 사회교리 학교 운영
  - 다. 평화기행 프로그램 운영
    - 제주의 자연, 역사, 문화에 대한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
  - 라. 평화교육관련 자료 수집, 제작
2. 2015 년 하반기 주요 활동계획서 중에 평화교육팀의 역할
    - 1) 평화교육위원회 구성: 평화교육강사진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 방향과 내용 등을 준비하여 진행
    - 2) 제주교구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화 교육교재마련
    - 3) 강정생명평화미사 사진 및 강론 자료집 및 영상제작
    - 4) 생명평화피정 및 연수, 평화순례프로그램 운영
      - 본당 및 개인별 참여자 모집-교회연론, 교구단위 후보 홍보
      -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평화순례프로그램 운영

#### V. 평화교육 계획을 위한 점검

1. 연대의 정신 - 사회정의, 공동선을 위해서 종교간의 연대, 종교 무소속 시민과 연대가 요구되고 협력이 필요하다.
2. 지성교육, 감성교육, 의지교육

3.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우선순위 - 어떤 색깔을 띠 것인지?
4. 경쟁(competition) 대 투신(commitment)
5. 알뜨르비행장과 관련된 미래 이슈를 평화교육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6. 교육 대상자에 대한 고려
  - 평화교육자
  - 가톨릭신자
  - 지역주민
  - 일반 시민을 대상
7. 교육프로그램의 분야
  - 평화교육자 양성
  - 체험 프로그램 - 평화순례 프로그램
  - 피정 - 평화를 영성과 연결하기
  - 연구 - 강정주민의 욕구조사 등
  - 출판, 번역 - 뉴스레터, 평화교육 교재 등
  - 평화 컨퍼런스 등
  - 치유프로그램 - 상담 등

## VI. 평화교육 파트에서 질문과 진행방식들

1. 나의 삶 혹은 일이 평화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강정에서 평화교육을 시작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면?
3. SWOT(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를 변형하여 적용하기. 즉 강점과 기회를 묶고, 약점과 위협을 묶어서 두 개의 질문으로 제시한다. 강정에서 평화교육의 강점(내부역량) 혹은 기회(외부환경)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약점 혹은 위협 요인은 무엇인가?
4. 강정 평화교육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5. 내가(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강정 평화교육에서 나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6. 단기(1~3년) 혹은 장기(5년 이상) 교육플랜 혹은 지침 만들기

제 2 회  
강 정  
평 화  
컨퍼런스